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총 괄	1
가. 회계별 세입예산안 총괄	1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총괄	2
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	3
1)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	5
2) 2026년 예산 이관 내역	7
라. 세출예산안 경비별 현황	8
마. 회계간 재정구조	9
2. 일반회계	10
가. 세입예산안	10
나. 세출예산안	11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13
가. 세입예산안	13
나. 세출예산안	14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

Ⅱ . 검토의견

1. 세출예산안	16
가. 일반회계	16

【총 괄】

(1) 치안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16
--	----

【경무인사기획관】

(1) 아산경찰병원 건립(7135-313)	25
(가) 개 요	25
(나) 우수 의료인력 확보 방안의 실효성 검토 필요	28
(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32
(라)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 동일 회계연도 편성 문제	37
(2) 경찰관채용교육(4135-311)	41
(가) 개 요	41
(나) 확장·가상현실 교육효과의 분석 및 교육 수요 조사 이후 신규 교육장 구축, VR훈련기기의 구매를 검토할 필요	42
(3) 경찰복지증진(7135-311)	50
(가) 개 요	50
(나) 정신건강 전문가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예방 사업의 확대 방안 마련 필요	52

【국제협력관】

(1)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60
------------------------------	----

(가) 개 요	60
(나) 내역사업 구분의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	62

【미래치안정책국】

(1) 경찰청 R&D 연구관리전문기관: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70
(가) 개 요	70
(나) 기획평가관리비 편성 기준 마련 필요	72
(다) 전문기관 안정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76
(2) 경찰건강 스마트관리(R&D) (4431-715)	80
(가) 개 요	80
(나)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사후 관리 방안 검토 필요	82
(3) 미래치안기반조성 (7132-311)	86
(가) 개 요	86
(나) 국민안전산업펀드 결성지원 우려 및 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필요	87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	95
(가) 개 요	95
(나) 총포 등 소지 허가자 통지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 효율화 필요	96
(다)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비목 변경 필요	101

【생활안전교통국】

(1) 사회적약자보호활동(1431-311)	103
(가) 개 요	103
(나) 범죄피해평가제도 활성화 및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검토 필요	104
(다)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능형 CCTV의 적극적 활용 및 지원 강화 필요	111

(2)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1331-314)	116
(가) 개 요	116
(나)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관련 면밀한 사업관리 및 지역사회 소통 필요	118
(다)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강화 필요	124

【경비국】

(1) 대테러위기상황관리(2132-311)	128
(가) 개 요	128
(나) 현장 투입 실효성과 활용 빈도를 고려한 AI 사족보행로봇 시범 도입 검토 필요	129

【수사기획조정관】

(1) 수사지원(1231-311)	133
(가) 개 요	133
(나)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스캔용역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인프라 보강 필요	134
(다) 수사경찰특근매식비 증액 필요성 재검토 필요	139

【형사국】

(1)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1231-313)	144
(가) 개 요	144
(나) 폴리그래프 예산 단가를 조정할 필요	146
(2) 과학수사역량강화(1231-314)	148
(가) 개 요	148
(나)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증액): 우편통지 비율 절감 통한 예산 효율화 필요	149

I.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총괄

-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개의 프로그램, 3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회계별 세입예산안 총괄

<2026년도 회계별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예산		2026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A)			%
일반회계	1,465,264	1,465,264	1,476,290	11,026	0.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91,539	91,539	94,712	3,173	3.5
합계	1,556,803	1,556,803	1,571,002	14,199	0.9

※자료: 경찰청, 총계기준

-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710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1조 5,568억 300만원(추경기준)보다 141억 9,900만원(0.9%)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0억 2,600만원(0.8%)이 증액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31억 7,300만원(3.5%)이 증액되었음.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총괄

□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계 기준 총 규모는 14조 3,029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13조 5,874억원 1,500만원(추경기준)의 5.3%인 7,155억 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총지출 기준 총 규모는 14조 2,44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13조 5,307억 9,800만원(추경기준)의 5.3%인 7,13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B)	증 감 (B-A)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총계)	13,584,578	13,587,415	14,302,949	715,534	5.3
합 계(총지출)	13,527,961	13,530,798	14,244,209	713,411	5.3
일반회계	13,488,033	13,490,870	14,203,091	712,221	5.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91,539	91,539	94,712	3,173	3.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6	5,006	5,146	140	2.8

※총지출 = 총계 - (회계간거래 + 회계기금간거래 + 계정간거래)

※자료: 경찰청

□ 총계 기준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7,122억 2,100만원(5.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책특회계”라 함)가 31억 7,300만원(3.5%) 증액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라 함)는 1억 4,000만원(2.8%) 증액되었음.

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

<경찰청 소관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B)	증감(B-A)	
		본예산	추경(A)			%
일반 회계	차세대지능형순찰플랫폼개발(R&D)	692	692	3,465	2,773	400.7
	미래치안기반조성	2,235	2,235	7,525	5,290	236.7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	1,500	1,500	4,932	3,432	228.8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 (폴리스랩3.0)(R&D)	936	936	2,494	1,558	166.5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4,095	4,095	9,675	5,580	136.3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13,088	13,088	24,705	11,617	88.8
	경찰인재개발	6,597	6,597	11,796	5,199	78.8
	사이버범죄수사단서통합분석 및 추론시스템개발(R&D)	3,640	3,640	6,136	2,496	68.6
	수사경찰전문교육	2,157	2,157	3,588	1,431	66.3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7,999	7,999	4,126	△3,864	△48.4
	경찰병원자산취득	2,915	2,915	1,438	△1,477	△50.7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34,250	34,250	16,004	△18,246	△53.3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R&D)	1,632	1,632	-	△1,632	△100.0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R&D)	3,381	3,381	-	△3,381	△100.0

※자료: 경찰청

-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차세대지능형순찰플랫폼개발(R&D)(400.7%), 미래치안기반조성(236.7%),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228.8%)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음.

□ 차세대지능형순찰플랫폼개발(R&D)는 움직이는 지구대에서 구현할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솔루션 구현 및 설계, 차량탑재 센서모듈 시제품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미래치안기반조성은 국민안전 산업펀드와 국제치안산업대전 예산이 반영되었고, 불법 마약류(R&D)은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 통합시스템과 다중어레이 복합센서 기반 마약탐지 및 은닉위치 추론 AI시스템 개발 등 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찰병원자산취득(△50.7%), 범죄대응 및 치안 상황관리(△53.3%) 및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R&D)(순감),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R&D)(순감) 사업이 있음.

1)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

□ 경찰청 부서별 주요 증액 사업은 경무인사지원 등이 있으며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음.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세부사업 이하)>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코드)	사업내용	'26예산안
① 기획조정관			
1	청사시설관리 (7131-312)	내진성능 확보	22,950
2	치안지원인력운영 (7131-314)	방호·미화·견위생 등 공무원 운영	190,171
② 경무인사기획관			
1	경무인사지원 (7131-313)	경찰관서 방호 및 보안강화	6,446
2	경찰복지증진 (7135-311)	직장 보육시설 운영지원	58,718
3	경찰관서직장보육시설 운영(민자) (7135-751)	직장 보육시설 정부지급금	22,909
4	경찰관채용교육 (4135-311)	안전한 사격훈련 환경 조성	3,952
③ 미래치안정책국			
1	경찰기동력강화 (4231-311)	전기 순찰차 교체	17,798
2	피복관리 (4231-313)	경찰관 피복비	76,056
3	장비관리유지 (4231-314)	권총	14,851
4	경찰유무선망개선 (4233-311)	수사부서 발신정보알리미	856
5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4234-511)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	5,006
④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1131-311)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3,485
2	범죄대응및치안상황관리 (1132-311)	112근무요원 전문 교육프로그램	720
⑤ 생활안전교통국			
1	교통안전활동 (1331-312)	교통 과태료 QR코드 도입	762
2	사회적약자보호활동 (1431-311)	스토킹 전자장치부착제도 관련 경찰-법무부 시스템 연계	3,309

연번	세부사업 (사업코드)	사업내용	'26예산안
⑥ 경비국			
1	경비경찰활동 (2131-311)	기동대 출동차량 교체	15,600
2	기동대운영및관리 (2131-314)	급식 및 출동안식	26,587
3	대테러위기상황관리 (2132-311)	사족보행로봇	2,400
⑦ 치안정보국			
1	정보업무전산화 (2231-511)	견문관리시스템 고도화	8,836
⑧ 수사기획조정관			
1	수사지원 (1231-311)	차세대 키스 지원	6,363
⑨ 수사국			
1	자능경제수사역량강화 (1231-31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7,010
2	사이버수사역량강화 (1231-315)	사칭·악성메일 분석 시스템	814
⑩ 형사국			
1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1231-313)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1,560
2	과학수사역량강화 (1231-314)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	4,640
3	과학수사시스템구축 (1232-511)	현장증거물 수집 자동화시스템 구축	1,462
⑪ 안보수사국			
1	안보수사역량강화 (1231-316)	산업기술유출 수사지원	850
⑫ 감사관			
1	감사·감찰·인권활동 (7133-311)	인권영향평가	112
⑬ 국제협력관			
1	해외치안협력강화 (3133-311)	국제공조시스템 범정부 공동활용	970
2	국제치안활동강화(CDA) (3133-312)	디지털포렌식랩 및 마약수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몽골 경찰 마약수사 역량강화	2,523
⑭ 중앙경찰학교			
1	신임순경교육 (4133-311)	신임순경 교육운영	22,072
⑮ 경찰병원			
1	진료업무운영관리 (4331-311)	의료장비 임차 등 진료업무 운영	22,026
2	전산운영경비(정보화) (4331-511)	병원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운영	2,419

※자료: 경찰청

2) 2026년 예산 이관 내역

-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업무 이관 및 사업 통합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이관되었음.

<2026년 경찰청 예산안 사업 이관 예산 목록>

(단위: 백만원)

2025년		→	2026년		사 유
세부사업	예산액	→	세부사업	예산액	
범죄예방및 생활질서유지 (1131-311)	957	→	수사지원 (1131-311)	957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예산 이관
범죄대응및 치안상황관리 (1232-311)	17,870		범죄예방및 생활질서유지 (1131-311)	17,870	지역경찰운영 예산 이관
수사지원 (1131-311)	263		수사인권보호활동 (1231-317)	263	원격화상조사 예산 이관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1231-313)	379			379	진술녹화실 설치 예산 이관
공공안녕정보활동 (2231-311)	1,520		경찰기동력강화 (4231-311)	1,520	상시 임차차량 예산 이관
	106			106	
사이버수사역량강화 (1231-315)	141		안보수사역량강화 (1231-316)	141	서울청 외청사 운영비 예산 이관
경무인사지원 (7131-313)	56		경찰관채용교육 (4135-311)	56	경찰 역사 교재 발간 예산 이관
	35		경찰복지증진 (7135-311)	35	경찰영웅 흉상 등 수범경찰현양 예산 이관
	31		경찰정보화기반 고도화(정보화) (4234-511)	31	경찰역사 아카이브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이관
차량관리 (4231-312)	22			22	스마트순찰차 멀티캠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 예산 이관
경찰관채용교육 (4135-311)	4,327		신임순경교육 (4133-311)	4,327	채용·승진시험 운영 예산 이관
경찰인재개발 (4132-311)	98		수사경찰전문교육 (4134-311)	98	수사기능 교육과정 이관에 따른 급식비 예산 이관

※자료: 경찰청

라. 세출예산안 경비별 현황

- 2026년도 경찰청 예산 총지출 14조 2,442억원 중 인건비가 11조 1,285억원으로 78.1%, 기본경비가 4,300억원으로 3.0%, 주요사업비가 2조 6,857억원으로 18.9%를 점유하고 있는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의 비중이 81.1%를 차지하고 있음.

<2026년도 경찰청 세출예산안 경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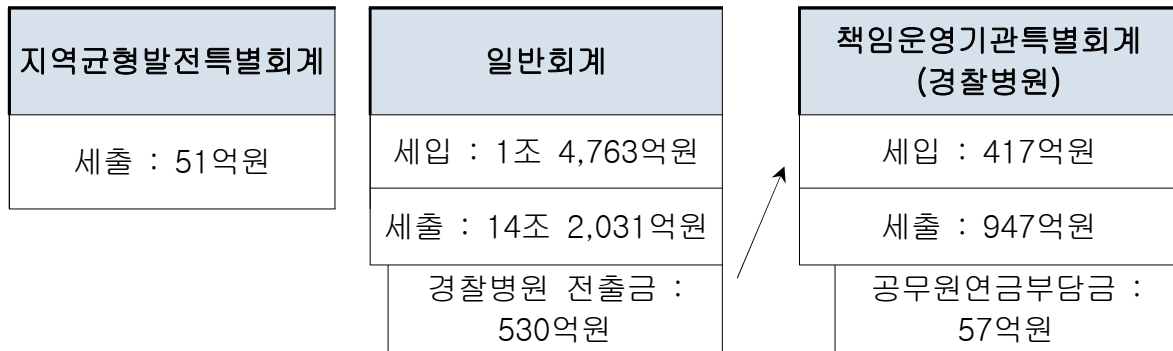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B)	증감 (B-A)		점유율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총지출)	13,527,961	13,530,798	14,244,209	713,411	5.3	100.0
인 건 비	10,508,150	10,508,150	11,128,500	620,350	5.9	78.1
기본경비	421,506	421,506	429,985	8,479	2.0	3.0
주요사업비	2,598,305	2,601,142	2,685,724	84,582	3.3	18.9

※자료: 경찰청

마. 회계간 재정구조

<경찰청 예산안 재정흐름도>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재정은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경찰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4조 2,030억원이며, 이 중 경찰병원 전출금 53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947억원이며, 이 중 공무원연금부담금 57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조 4,76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1조 4,652억 6,400만원 대비 0.8%인 11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1,465,264	1,465,264	1,476,290	11,026	0.8
재 산 수 입	3,449	3,449	3,728	279	8.1
경상이전수입	1,452,238	1,452,238	1,462,429	10,191	0.7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5,555	5,555	5,975	420	7.6
관유물매각대	4,022	4,022	4,158	136	3.4

※자료: 경찰청

-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이전수입¹⁾이 101억 9,1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이전수입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 증가(+27억 5,400만원)에 기인한 것임.

1) 경상이전수입은 벌금및과료, 과태료, 징계부과금,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

나. 세출예산안

□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지출 기준 14조 2,44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13조 5,307억 9,800만원 대비 5.3%인 7,13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B-A)	%
	본 예산	추경(A)			
합 계(총 계)	13,584,578	13,587,415	14,302,949	715,534	5.3
합 계(총지출)	13,527,961	13,490,870	14,244,209	713,411	5.3
범죄예방및치안상황대응강화	63,524	63,524	61,625	△1,899	△3.0%
범죄수사활동	387,106	389,820	401,443	11,623	3.0%
교통안전·소통 확보	305,207	305,207	309,555	4,348	1.4%
사회적약자보호	16,491	16,491	18,462	1,971	12.0%
사회 질서유지	192,477	192,477	184,454	△8,023	△4.2%
공공안전위험예방및대응강화	37,772	37,772	43,332	5,560	14.7%
국제치안협력공조강화	15,126	15,126	16,653	1,527	10.1%
전문경찰양성	71,962	71,962	88,614	16,652	23.1%
치안인프라구축	489,279	489,279	501,882	12,603	2.6%
과학치안활성화	64,027	64,027	68,212	4,185	6.5%
경찰행정지원	11,794,237	11,794,360	12,455,865	661,505	5.6%
회계간거래	50,825	50,825	52,994	2,169	4.3%

※총지출 = 총계 - 회계간거래(전출금)

※자료: 경찰청 |

□ 프로그램별 증감내역을 보면, 전문경찰양성 166억 5,200만원(23.1%), 치안인프라구축 126억 300만원(2.6%), 범죄수사활동 116억 2,300만원(3.0%)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질서유지 80억 2,300만원(△4.2%),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18억 9,900만원(△3.0%)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가. 세입예산안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인 경찰병원의 202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947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915억 3,900만원 대비 3.5%인 31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B)	증감(B-A)	%
	본예산	추경(A)			
총 계	91,539	91,539	94,712	3,173	3.5
손익계정	88,441	88,441	93,091	4,650	5.3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32,207	32,207	30,144	△2,063	△6.4
재산수입	49	49	114	65	132.7
경상이전수입	46	46	46	-	-
채화및용역판매수입	6,403	6,403	6,403	-	-
관유물매각대	25	25	25	-	-
세계잉여금	1,492	1,492	4,151	2,659	178.2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8,219	48,219	52,208	3,989	8.3
자본계정	3,098	3,098	1,621	△1,477	△47.7
세계잉여금	490	490	833	343	7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608	2,608	788	△1,820	△69.8

※자료: 경찰청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손익계정에서는 세계잉여금이 26억 5,900만원 (178.2%) 증액되었고, 정부내부수입및기타가 39억 8,900만원(8.3%) 증액 되었음.
- 자본계정에서는 세계잉여금이 3억 4,300만원(70.0%) 증액되었고 정부내부수입및기타가 18억 2,000만원(△69.8%) 감액되었음.

나. 세출예산안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인 경찰병원의 2026년도 총지출 기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947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915억 3,900만원 대비 3.5%인 31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B)	증감(B-A)	
	본 예산	추경(A)		)	%
합 계(총 계)	91,539	91,539	94,712	3,173	3.5
합 계(총지출)	85,747	85,747	88,966	3,219	3.8
손 익 계 정	88,441	88,441	93,091	4,650	5.3
인건비	50,207	50,207	53,861	3,654	7.3
기본경비	3,087	3,087	3,098	11	0.4
진료업무지원	25,372	25,372	26,350	978	3.9
장례식장운영	3,983	3,983	4,036	53	1.3
공무원연금부담금	5,790	5,790	5,744	△46	△0.8
감가상각비	1	1	1	-	-
당기순이익	1	1	1	-	-
자 본 계 정	3,098	3,098	1,621	△1,477	△47.7
기본경비	183	183	183	-	-
자산취득	2,915	2,915	1,438	△1,477	△50.7

※총지출 = 총계 - 회계기금간(공무원연금부담금) - 계정간거래(감가상각비, 당기순이익)

※자료: 경찰청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손익계정에서 인건비가 36억 5,400만원(7.3%) 증액되었고 자본계정에서는 자산취득이 14억 7,700만원(△50.7%) 감액되었음.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
- 경찰청은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제주자치경찰인력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위한 예산을 관리하고 있음.
-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지특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51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0억 600만원 대비 2.8%인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경찰청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A)			%
합 계(총지출)	5,006	5,006	5,146	140	2.8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006	5,006	5,146	140	2.8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5,006	5,006	5,146	140	2.8

※자료: 경찰청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

【총괄】

(1) 치안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경찰청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방식으로 시중 AI 소프트웨어 구매·최적화, 구독, 연구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업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인공지능 기술은 향후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단기 구독 방식보다는 평생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에는 체계적인 계획을 기초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 도입·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2026년 예산편성 중점방향으로 KICS-AI 등 업무전반에 인공지능의 접목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들은 방대한 양의 디지털화된 정보와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함으로써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26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 많은 양의 CCTV 영상 정보의 신속한 분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보급 사업, 경찰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 등이 있음.

<인공지능 기술 도입·개발 사업>

구 분	내역사업[세부사업]	2026년 예산안
특정 분야 온라인 상의 정보·데이터 수집·분석	SNS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1231-313)]	7억 2,000만원
	AI기반 방첩·대테러 역량강화 : 방첩·대테러 정보 전문분석 서비스 [안보수사역량강화(1231-316)]	3억 8,600만원
	사제총기 등 위험정보 상시점검체계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	8억 9,800만원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1231-313)]	15억 6,000만원
	아동학대 영상분석요약 프로그램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1231-313)]	12억원
경찰 업무 플랫폼 구축 및 기존 플랫폼의 보안강화	경찰청 AI 통합플랫폼 구축 ISP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 (4234-511)]	5억 1,900만원
	지문 범죄경력 관리시스템에 AI기반 종합 장애대응 시스템 구축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1232-511)]	12억 4,200만원

구 분	내역사업[세부사업]	2026년 예산안
인공지능 기술 연구 개발(R&D) 사업	사이버 범죄 대응 기술 [사이버 범죄 수사단서 통합분석 및 추론 시스템 개발(R&D)(4431-726)]	59억원
	능동형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형플 랫폼 기반 솔루션 개발 [차세대 지능형 순찰 플랫폼 개발 (R&D)(4431-724)]	33억 3,200만원
	로컬환경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 개발 [사이버수사 지원기술 개발 (R&D)(4431-710)]	20억원
	과학기술 기반 군중 밀집관리 기술개발 [과학기술 군중 밀집관리 기술개발 (R&D)(4431-720)]	19억원
	인공지능 기반 고속위해 기체분석 플랫폼 구축 [과학적 범죄 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 (R&D)(4431-631)]	18억원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 추적 연계 마약 수사 통합 시스템 개발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 (R&D)(4431-718)]	18억원
	치안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컴퓨팅 기술 연구개발 [치안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R&D)(4431-730)]	15억 6,000만원
	다중 어레이 복합센서 기반 마약탐지 및 은닉위치 추론 AI시스템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 (R&D)(4431-718)]	15억원
계		263억 1,700만원

① 특정 분야에 대한 온라인상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 2026년 예산안에는 온라인 상의 마약, 테러 및 안보 위협, 총기 제조와 관련된 정보를 조기에 적발하는 시스템(SNS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방첩·대테러 정보 전문분석 서비스, 사제총기 등 위험정보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포함하고 있음. 동 사업의 사업 추진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 구매·커스터마이징, 1년 이용(구독) 등 다양하고, 이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음.

<특정분야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 수집 분석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

구 분	SNS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방첩·대테러 정보 전문분석 서비스	사제총기 등 위험정보 상시점검체계
세부 내역	① 소프트웨어 개발 : 4억 2,000만원 ② 하드웨어 구매 : 3억원	① 소프트웨어 1년 이용 : 3억 8,600만원	① 소프트웨어 구매 : 4억 8,000만원 ② 연구개발 : 4억 1,800만원
비고	개발자가 개발하고, 운영을 위한 서버 등 구축	※ 1년 구독 시 유지보수 불필요 ※ 장비 도입 시 14억 8,700만원 소요(유지보수 필요)	시판 AI 프로그램을 구매 및 커스터마이징(유지비 불필요)

- SNS 마약채널 첩보시스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약채널을 검색하고, 첩보를 수집하며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서버를 구축함. 동 시스템은 머신러닝 기술(지도학습 기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SNS 마약채널의

대화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정보수집 모델을 개발하는 것임.
경찰청은 향후 딥러닝(딥페이크),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 향상된 기술을 접목할 계획임.²⁾

- 사제총기 등 위험정보 상시체계 시스템은 불법 총기 제조 방법 등을 자동으로 탐지·분류·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AI 소프트웨어 구매(4억 8,000만원)하고 커스터마이징(연구개발 4억 1,800만원)하는 방식으로 구축될 계획임. 동 시스템은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 시스템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연계하여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임.
- 방첩·대테러 분야에서는 방첩대상 및 테러위험인물의 공개된 SNS 활동(웹데이터)을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수집·분석하는 방첩·대테러 정보 전문분석 서비스를 1년 동안 구독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예산 3억 8,600만원이 반영됨. 방첩·대테러 정보 전문분석 서비스는 전세계 100여개국 법집행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테러 의심 인물 목록 작성·제공, 대상자 주변 인물 및 관계도 분석, 대상자 체류 지역 특정, 관계 인물 중 국내 체류 계정을 분류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음.

2) SNS 마약채널 첩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으로는 다크웹 기반 마약 유통 모니터링 및 가산자산 거래 연계 마약수사 시스템 개발 사업이 있음. 동 사업은 마약의 은어를 이용하여 시스템 구축자가 패턴을 직접 코딩하는 방식의 규칙(Rule) 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다크웹 가상 자산 추적 중심의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사업임.

② CCTV 영상 분석 시스템

- 2026년 예산에는 CCTV 영상 분석시스템과 아동학대 영상분석 시스템 보급 사업이 있음.

구 분	CCTV 영상 분석시스템	아동학대 영상분석요약 프로그램
세부 내역	15억 6,000만원 = 2,000만원(라이선스 단가)×78개	12억원 = 프로그램 단가 1억원 × 12개
비고	78개 경찰관서에 보급	12개 시도경찰청에 보급

- CCTV 영상 분석시스템은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분석을 위해 인공지능AI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임. 인공지능 영상분석 프로그램은 화질개선, 안면정보 추출, 필터링 설정, 신속분석, 분석보고서 추출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CCTV 영상 분석시스템은 2025년 전국 형사기동대 43개팀에 보급 중이고, 2026년에는 78개팀에 보급 예정임. 동 사업의 예산은 라이선스 단가가 2,000만원임.

- 아동학대 영상분석 시스템 보급은 CCTV 속 학대 장면을 찾아내고 영상을 축약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의 성과물인 아동학대 영상분석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6개 시도청에 보급되었고, 2026년에는 나머지 12개 시도청에 보급할 예정임. 프로그램 당 단가는 1억원임.

③ 경찰의 업무 플랫폼 구축, 기존 플랫폼의 보안 강화

- 2026년 예산안에는 경찰청 AI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예산 5억 1,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경찰청 AI 통합플랫폼은 경찰청 구성원 전체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지능형 업무시스템에는 문서 초안 작성·요약·검색 기능, 챗GPT와 같이 대화형으로 통계 매뉴얼, 법령 등의 검색·분석 시스템, 보안문서 번역, 회의록 작성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그리고 지문 및 전과기록 관리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보안 위협 저감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종합 관제 대응 체계를 도입함. 동 사업의 추진 방식은 시중에 판매되는 장애대응 솔루션, 해킹 방지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해당 시스템이 최적화되도록 개발하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서버 등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방식임.

④ 연구개발 사업

- 연구개발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능형 순찰플랫폼 개발, 사이버범죄 수사 단서 통합 분석 및 추론 시스템 개발, 과학적 범죄 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상황 판단을 돕는 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치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6년 예산 사업에서는 인공지능 도입 방식이 각 사업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치안 업무 분야별로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수요의 특징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 분석 기술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용하고, 구입하는 비용과 1년 구독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1년 등 단기간 구독 방식보다는 평생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도입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된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³⁾의 원인이 챗GPT 검색 결과를 검증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지적됨.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도입하는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술이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3) 법률신문 2025년 9월 26일 기사, “경찰, ‘가짜 판례’로 아동학대 불송치 결정”

있음.

-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동 계획을 기초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기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무인사기획관]

(1) 아산경찰병원 건립(7135-313)

-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지방 소재 공공병원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와 단계적 개원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병원 운영 수입·지출 전망과 이용 목표를 포함한 재정 확보 방안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26년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동시 편성된 것은 사업 추진 일정상 부적절하므로, 실시설계비를 조사·측량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아산경찰병원건립 사업(7135-313)은 치안현장에서 입은 부상과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경찰 특화 종합병원을 충남 아산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0억 5,000만원이 편성된 신규 사업임.

<아산경찰병원건립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아산 경찰병원 건립	-	-	3,050	3,050	순증

※ 자료: 경찰청

- 동 사업은 2025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6~2029년(4년), 총사업비는 1,724억 1,400만원으로 책정되었음.
- 아산경찰병원은 건축 연면적 28,717㎡(지상 5층, 지하 2층), 300병상 규모로, 심·뇌혈관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6개 전문진료센터와 24개 진료과를 운영할 계획임.

<아산경찰병원 건립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입은 부상과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경찰 특화 종합병원 설치
- ※ (사업기간) 2026~2029, 4년간

■ 사업 개요

- (사업부지) 충남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 81,118㎡(연면적 28,717㎡)
- (총사업비) 1,724억원(△ 공사비 983억 △ 시설부대경비 113억, 의료장비 321억 등)
- (시설구성) 300병상, 24개 진료과, 6개 특화진료센터*(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

외래부	병동부(300병상)				
응급실	일반병동	재활병동	호스피스	감염병동(음압)	중환자실
28병상	218병상	34병상	10병상	20병상	18병상

* (6개 센터) ① 정신건강센터 ② 심뇌혈관센터 ③ 호흡기전문진료센터 ④ 근골격센터
⑤ 비뇨의학센터 ⑥ 건강증진+대사질환센터

■ 향후 계획



□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전액(22억 8,500만원)과 실시설계비의 일부(7억 6,500만원)가 편성되었으며, 2027년부터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임.

<아산경찰병원의 연차별 총사업비 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사 업 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공 사 비	98,320	-	2,257	38,427	57,636
기본 조사 설계비	2,285	2,285	-	-	-
실시 설계비	2,792	765	2,027	-	-
조사·측량비	983	-	983	-	-
감 리 비	4,905	-	-	1,962	2,943
시설 부대비	339	-	170	102	67
기타 투자비	47,116	-	-	-	47,116
예 비 비	15,674	-	663	4,083	10,928
합 계	172,414	3,050	6,100	44,574	118,690

※ 자료: 경찰청

(나) 우수 의료인력 확보 방안의 실효성 검토 필요

-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①민간수준 보수 상향 ②정주 여건 조성 ③교통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고질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에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 전문의 58명, 간호직 226명 등 총 486명의 인력 확보를 위해 ①민간수준 보수 상향 ②정주여건 조성 ③교통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 전문의 58명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경찰청의 의료인력 확보 방안>

구 분	주 요 내 용
민간수준 보수 상향	• 인사처의 '의무직 임기제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 방침 활용 • 민간 수준의 자율적 연봉 협상 추진
근무·정주 여건 조성	• 진료과별 2인 이상 전문의 확보로 업무부담 해소 • 의료인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예: 이주정착 장려금 등 논의) • 폴리스 메디컬타운 개발(58.2만평 규모)
교통여건 개선	• 천안아산역-경찰병원 간 전용 셔틀버스 운행
	• 서울역에서 1시간 내 출·퇴근 가능

※ 자료: 경찰청

□ 그러나 서울경찰병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충원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산경찰병원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2024년 서울경찰병원의 인건비 집행률은 82%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정원 681명 중 실제 근무 인원은 576명(84.6%)에 불과함. 특히 간호사는 정원 268명 중 46명이 결원되어 충원율이 82.8%에 그쳤고, 간호조무사는 정원 68명 중 25명이 결원되어 충원율이 63.2%에 불과함. 전공의 파업 여파로 레지던트 39명 중 30명, 인턴 14명 전원이 공석 상태임.

<서울경찰병원 주요 직렬별 정원 및 결원 현황(2024년 말 기준)>

구 분	정원(A)	현원	근무인원(B)	결원(A-B)	충원율(B/A)
전체	681	623	576	105	84.6%
간호사	268	247	222	46	82.8%
간호조무사	68	47	43	25	63.2%
레지던트	39	9	9	30	23.1%
인턴	14	0	0	14	0%

※ 자료: 경찰청

□ 서울경찰병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충원을 위해 여러 차례 채용공고를 시행하였으나, 목표 인원의 약 60%만 채용하는 데 그쳤음. 경찰병원 측은 간호사는 8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간호조무사는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해당 직급에 따른 보수를 받는데 민간병원의 보수 수준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

이라 보기 어렵고, 간호 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이 제시한 아산경찰병원 의료인력 확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음.

첫째, 민간수준 보수 상향이 실제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서울경찰병원에서도 임기제 공무원 전문의에 대해 민간수준 연봉협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결원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서울 소재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수도권인 아산지역에서 226명의 간호직을 확보하는 것은 보수 상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음.

둘째, 정주 여건 조성 방안 중 '폴리스메디컬타운 개발'은 아산시가 추진하는 장기 도시개발 사업으로, 경찰병원 개원 시점(2029년 예정)에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주 정착 장려금⁴⁾의 구체적인 규모나 지급 방식도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을 판단하기 곤란함.

셋째, 교통여건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천안아산역 셔틀버스는 수도권

4) 경찰청은 경찰청·충남도·아산시 업무협약('23.3.24.)에 따라 아산경찰병원 직원 대상 이주 지원 인센티브를 발굴·지원할 계획임. 또한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1.4.26. 시행)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중 전입자에 대해 이주정착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 제공방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임.

거주 의료진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서울경찰병원과 달리 아산경찰병원은 매일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구조임. 이는 의료진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근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참고로, 국립소방병원(충북 음성군 소재)의 경우에도 개원 준비 과정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적 문제로 파악됨.
- 따라서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제시한 방안들이 실제로 58명의 전문의와 226명의 간호직 등 총 486명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충분한지 면밀히 재검토 하고, 서울경찰병원의 간호사·간호조무사 결원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아산경찰병원 인력 확보 전략을 수립하거나, 필요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 또는 단계적 개원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서울경찰병원의 일반회계전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경찰병원도 유사한 재정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경찰병원은 경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 수입만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지 못해 일반회계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최근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

<서울경찰병원 손익계정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39,346	32,778	29,499	24,169	32,207	30,144
병원수입	5,371	6,226	6,360	6,048	6,363	6,363
일반회계 전입금	41,508	32,454	27,076	45,646	48,219	52,208

※ 자료: 경찰청(2020~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기준)

- 일반회계전입금은 2020년 433억원에서 2024년 45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예산안에서는 522억원으로 편성되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경찰청은 ①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2020.12~

2022.5)으로 인한 진료환자 감소 ②의료대란 및 전공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 지정되는 것임. 기관수입의 많은 부분을 일반회계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경찰청의 아산경찰병원 재정 확보 방안>

구 분	내 용
유리한 진료권 환경	• 인근에 상급종합병원 부재 • 종합병원도 아산 충무병원 1개소만 존재
경찰관 이용률 제고	• 정신건강센터·비뇨의학센터 등 특화 • 경찰 교육기관 연계 건강검진 • 서울-아산 진료기록 공유
지역환자 유치	• 지역 병·의원과의 협약을 통한 환자 전원체계 마련(인근 대학병원과 MOU⁵⁾ 체결) • 심뇌혈관센터·호흡기전문센터 등 충남권·아산시의 다빈도 질환 고려, 지역에 부족한 공공전문진료센터 특화)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이 제시한 "유리한 진료권 환경"은 경쟁 의료기관이 적다는

5) 단국대병원, 순천향대병원으로부터 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운영, 병원 간 진료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 체결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수신 완료('25. 7. 14., 7. 17.)

의미이나, 이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함. 2024년 7월 기준 아산시 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9개소, 의원 157개소 등 총 335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아산시 인구는 약 37만명 수준으로,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용도 필수적임.

<아산시 내 의료기관 현황(2024.7. 기준)>

(단위: 개소)

의료기관 유형	읍	면	동	합계
종합병원	-	-	1	1
병원	5	1	3	9
의원	33	45	79	157
치과의원	18	26	50	94
한의원	15	20	26	61
기타	4	25	4	33
총합계	75	97	163	335

※ 자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또한,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의 "경제적 가치"를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 편익 145억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 편익이지 병원의 재정 수입과는 무관함. 병원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수입 확보 방안이 필요함.

□ 참고로,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 및 적정성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경찰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 유사 공공병원과 비교한 결과, 환자 경험(85.16점)은 전체 평균(81.30점)을 상회하나, 의료인력 확보율, 경영성과, 진료역량에서는 유사 공공병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유사 공공병원과 서울경찰병원 역량 비교(2023년 기준)>

구 분	환자경험 (심평원 병원평가)	의료인력 확보율 (100명상당 전문의 수)	효율성 (전문의 1인당 조정환자)	경영성과 (전문의 1인당 의료수익)	진료역량 (진료과 수)	진료역량 (*적정성 평가 1등급 항목 수)
국립중앙 의료원 (2023)	85.34	23.84명	1,549명	870백만원	30개	16개 항목
서울의료원 (2023)	86.18	24.58명	1,281명	544백만원	25개	22개 항목
경찰 병원	85.16	18.47명	1,740명	438백만원	23개	7개 항목

※ 자료: 경찰청

□ 특히 의료인력 확보율은 100명상당 전문의 수가 18.47명으로 유사 공공병원(23~24명)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전문의 1인당 의료수익은 438백만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870백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적정성 평가 1등급 항목 수도 7개로 국립중앙의료원(16개), 서울의료원(22개) 대비 낮아 수익성과 진료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환자 경험 평가의 6개 세부 영역 중 의사 영역이 78.76점으로

전체평균(83.00점)을 하회하고 있음⁶⁾. 의사 영역은 의사의 존중과 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 등 환자와 의사 간 소통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특히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문항은 전국 평균(74.53점)에서도 24개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임. 서울경찰병원의 낮은 의사 영역 점수는 의료인력 확보율이 유사 공공병원 대비 현저히 낮아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많고, 이로 인해 환자 1인당 진료시간 및 소통 기회가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함.

- 종합하면,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이 서울경찰병원과 같이 일반회계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지 않도록, ① 경찰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이용 목표 설정 ② 진료과목별 수입/지출 전망 ③ 단계적 개원 등을 포함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⁷⁾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4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2024.9.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4개 기관 대상)

7) 유사 의료시설인 국립소방병원의 경우, 의료·운영계획 연구용역(예산 4억원)을 통하여 △구체적인 수행 기능과 역할 정립 △의료환경 분석 △전문센터·공공의료기능·의학연구소 등 기능별 구체적인 운영전략 수립 △조직·인력계획 수립 △재정계획 수립 △기본설계 필수 반영사항 등 공간배치 계획 수립 등 병원건립을 위한 구체적 종합계획을 수립함

(라)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 동일 회계연도 편성 문제

-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본설계비 전액(22억 8,500만원)과 실시설계비(7억 6,500만원)를 동시에 계산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의 비목을 동시계상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선행단계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후행 단계를 진행토록 하기 위함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추진 단계별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려는 취지임.

<아산경찰병원의 연차별 총사업비 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6년	2027년	2028	2029년
합계		172,414	3,050	6,100	44,574	118,690
공사비		98,320	-	2,257	38,427	57,636
시설 부대 경비	기본조사설계비	2,285	2,285	-	-	-
	실시설계비	2,792	765	2,027	-	-
	감리비	4,905	-	-	1,962	2,943
	조사·측량비	983	-	983	-	-
	시설부대비	339	-	170	102	67
기타투자비		47,116	-	-	-	47,116
예비비		15,674	-	663	4,083	10,928

※ 자료: 경찰청

- 특히, 아산경찰병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등 필수 행정절차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함. 또한, 기본조사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9.5개월(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6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동시 계상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공종별 설계단계별 설계기간>

(단위: 월)

구 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 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 이상
건축	4.5	7	9.5	7	7.5	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재인용)

- 둘째, 아산경찰병원 건립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기본조사설계를 진행하고, 2027년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에 해당하는 조사·측량비가 편성되지 않고 2027년에 편성되어 있어 사업계획과 예산배분 계획이 일치하지 않음

□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인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시 조사·측량비, 인증용역비, 각종 영향평가 비용 등을 ‘조사·측량비’ 항목으로 별도 산출하도록 제시하고 있음.⁸⁾

또한,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 지침(기재부)」에서는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부가적 소요경비를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조사·측량비’가 기본조사설계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조사·측량비(공사비의 1%)’가 기본설계비에 해당함을 간과하여, 2026년에는 설계 자체에 소요되는 순수 설계비만을 고려하고, ‘조사·측량비’는 2027년 편성을 계획한 것으로 보임.⁹⁾

□ 예비타당성조사 시 ‘조사·측량비’로 수행토록 제시하는 조사·측량, 각종 영향평가 및 각종 인증용역은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인증기관의 보완요청 등에 따라 협의·심의 소요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인허가·착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12) 114p 가) 조사비 및 측량비: 각종 측량, 조사, 시험 및 검사 등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하는 항목으로 지반조사비, 지형현황측량비 등이 있다. (예시: 조사 및 측량비, 지능형 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등급 등, 각종 영향평가 비용 등, 미술장식품설치비 등)

9) 경찰청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사업의 초기 단계의 한계점으로 조사 및 측량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KDI)’에 따라 조사 및 측량비 등 항목을 일괄하여 공사비의 1%로 산정하였음.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에 편성된 실시설계비는 삭감하고, 2027년도에 편성예정이었던 조사·측량비를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경찰청이 2027년도에 계획했던 조사·측량사업을 2026년도로 앞당겨 수행하고자 한다면 ① 용역 범위·내용·일정의 확정, ② 과업지시서 작성 및 입찰 준비, ③ 기본설계와의 일정 연계 및 조정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므로, 2026년도 내 실질적 착수가 가능하도록 예산 배분, 세부 과업 내용, 발주 절차 등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찰관 채용교육(4135-311)

- 확장현실 교육훈련 및 실감형 가상훈련은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교육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신규임용자 및 임용 1년 미만 경찰관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효과를 점검하고, 확장현실 교육훈련과 실감형 가상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훈련장 구축 및 가상훈련 장비를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관 채용교육(4135-311)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장훈련·직무교육·시뮬레이션 훈련, 분야별 치안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화 위탁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182억 4,300만원 대비 14억 4,800만원 증액(7.9%)된 196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찰관 채용교육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경찰관 채용교육	16,094	18,243	19,691	1,448	7.9
· 경찰역량 강화	8,605	10,290	16,095	5,805	56.4
·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3,633	3,350	3,320	△30	△0.9
· 채용·승진시험 운영	3,858	4,603	276	△4,327	△94

※자료: 경찰청

(나) 확장·가상현실 교육효과의 분석 및 교육 수요 조사 이후
신규 교육장 구축, VR훈련기기의 구매를 검토할 필요

- 내내역사업인 확장현실¹⁰⁾ 교육훈련(XR) 예산은 10억 800만원으로, 장비·훈련장 유지 관리를 위한 3억 1,000만원과 부산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 2곳의 신규 훈련장을 구축하는 예산 6억 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내내역사업인 실감형 가상훈련(VR) 예산은 8억 9,600만원으로, 실감형 가상훈련기기 보급을 위한 6억 7,200만원, 콘텐츠 개발 2억원, 연간 유지관리비 2,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 경찰청은 향후 5개년에 걸쳐 전국 259개 경찰서에 2대씩 총 518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예산안을 통해서는 1년차 분의 기기 48대를 보급할 계획임.

10) 확장현실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의 개별 활용 또는 혼합 활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확장된 현실을 창조하는 기술임. 가상현실(VR)이 360도 영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도록 하는 기술로서 눈 전체를 가리는 헤드셋 형(HMD) 단말기가 필요함. 증강현실(AR)은 실제 사물 위에 컴퓨터그래픽(CG)을 통해 정보와 콘텐츠를 표시하는 것으로 구글 글라스와 같은 안경으로 표현이 가능함(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확장현실 교육훈련(XR), 실감형 가상훈련(VR) 2026년 예산안 세부내역>

- ① 확장현실 교육훈련(XR): 10억 800만원(순증)
 - 장비·훈련장 유지 관리: 3억 1,000만원(서버이전 9,000만원 + 5개소 유지관리 및 라이선스: 2억 2,000만원)
 - 신규 훈련장 구축: 6억 9,800만원(부산경찰청, 인천경찰청 각 3억 4,900만원)
- ② 실감형 가상훈련(VR): 8억 9,600만원
 - 실감형 가상훈련기기 6억 7,200만원(1,400만원×48대)
 - 콘텐츠 개발: 2억원
 - 유지관리: 2,400만원

□ 확장현실 교육 훈련은 2~8인이 팀단위로 확장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대응하여 현실감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10개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확장현실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장은 경찰청 교육장(서울), 경찰인재개발원(아산), 중앙경찰학교(충주), 이동형 훈련장 2대가 설치되어 있음. 현재 구축된 훈련장에서 2일 또는 6일 동안 개발을 진행중인 시나리오를 재생하여 훈련을 실시함.
- 경찰청은 2026년에 구축된 훈련장에서 시범운영을 위한 조작법 학습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신입교육생과 임용 1년 미만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임.

- 확장현실 교육훈련 콘텐츠와 관련해서 연구개발이 종료하는 2025년 12월까지 실증을 통해 콘텐츠를 수정중이며, 2026년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 의견을 받아서 필요시 시나리오 전체 흐름이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할 예정임.

<확장현실 교육훈련장 현황>

구 분	위 치	구축 시점	소요 예산·기간	훈련실시 사례	시 설	사 진
경찰청 교육장*	서울	2023년	21억 8,000만원 (3개월)	2024년 11월~12 월(6일)	4인·2인·1인 훈련실·강평실· 브리핑실 등	
경찰인재 개발원	아산	2024년	10억 8,900만원 (2개월)	2025년 4월(2일) 5월(2일)	8인·4인 훈련실· 강평실·브리핑 실 등	
중앙경찰 학교	충주	2025년	20억 4,700만원 (4개월)	2025년 7월(2일) 9월(2일)	8인·4인 훈련실· 강평실 등	
이동형 훈련장 2대	(이동형)	2023년	11억 5,500만원 (7개월)	홍보용 배치	4인 훈련실 등	

※ 경찰청 교육장(서울)은 2026년 초까지 축소 이전 예정[동 사업은 2025년 청사시설관리(7131-312)의 긴급복구 등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 중임]

자료: 경찰청

<확장현실 교육 콘텐츠 시나리오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훈련 시간	참가 인원
교통사고	교통사고 현장 통제 및 부상자 구호, 사고현장 증거수집, 사후 조치 기록을 하여 교통사고 대응	15분	2인
스토킹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응하여 피해자 구호 및 대처, 행위자 수색 및 추적, 행위자 제압, 돌발상황 대처	15분	4인
물리력대응	폭행 현장에서 행위자 체포, 피해자 구호, 촬영 고지 등 역할을 수행하여 절차에 맞게 물리력 대응	15분	4인
주취난동	주취난동 상황에서 주변 상황을 통제 및 관리하고, 주취난동 상황을 제압 및 대처	15분	4인
스트레스 순응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집중력, 자신감, 통제력을 잃지 않고 현장 대응	20분	4인
물리력 대응 (대형유지)	각자의 학습 위치에서 단계별로 대형 유지-제압 및 체포 고지의 역할을 수행	10분	4인
가정폭력	단계별로 가정폭력 상황을 체험하여 가정 폭력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법 수행	20분	2인
이상동기	5가지 유형의 이상동기 범죄 시나리오를 체험하여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법 수행	-	최대 8인
대테러	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 용의자 수색 및 제압, 인질 대응, 물리력 사용, 화학 테러 대응 등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학습	20분	4인
사격훈련	흉기 난동 등의 물리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총기류를 사용한 제압의 역할을 수행하며 올바른 총기류 사용법을 익히도록 학습	5분	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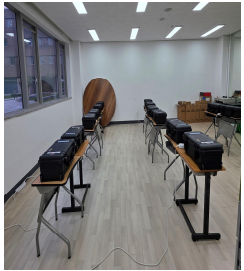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 실감형 가상훈련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헤드셋과 컨트롤러 장비를 활용하여 112신고 상황에 대응한 현장감 있는 훈련으로, 훈련 참가인원은 2명이고, 훈련 시나리오는 가정폭력, 흉기난동, 집단폭력 등 8개가 개발되어 있음.

○ 실감형 가상현실 훈련 장비는 2024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16대가 보급되어 2025년 6월부터 신임경찰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운영중이고, 경찰대학에 4대가 보급되어 2026년 2월 겨울계절학기의 의무 교육과정으로 편성 예정임.

○ 2025년 예산을 통해서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가상현실 훈련 장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임.

<2024년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에 보급된 실감형 가상훈련 장비 활용 현황>

구 분	보유 대수	활용 현황	교육장 모습
경찰대학	4대	· 교수요원 대상 VR기기 시연회 2회(1·8월) · 체험부스 운영(9월) · 겨울계절학기(2026년 2월) 교육과정(의무)에 편성 예정	
중앙경찰학교	16대	· 교수요원 대상 VR체험 및 사용법 교육(1월) · 2025년 6월부터 신임경찰 교육과정(의무)에 포함 · 5개 수업(112초동대응 실무, 풍속·기초질서, 관계성 범죄 초동조치, 민감사건 초동조치, 강력범죄 초동조치)에서 각 3시간씩 총 15시간 교육(연말까지 2,288명 수강 예정)	

자료: 경찰청

<실감형 가상훈련 교육 콘텐츠 시나리오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훈련시간
가정폭력	가정집에서 발생한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 행위자 체포, 피해자 분리조치 등을 진행 ※ VR 컨트롤러 조작 방법을 숙지를 위해 ‘튜토리얼’ 형태로 구성	약 10분
흥기난동	주점 흥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해 주취자 난동 저지 및 체포,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	약 15분
정신이상자 응급입원	아파트 상가에서 난동 중인 정신질환자를 제압하고, 신원확인 및 응급입원 조치를 진행	약 15분
집단폭력	노상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 저항하는 행위자를 제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	약 15분
치매노인 보호조치	치매노인을 지구대에서 보호조치하면서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에 인계하는 절차 등을 진행	약 15분
스토킹	늦은 밤 여성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스톱킹 행위자를 검거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진행	약 15분
아동학대	가정집 내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모친·아동 분리 면담 통해 학대 정황 확인하고 여청수사팀 인계 절차 등을 진행	약 15분
교제폭력	전 연인의 집을 찾아와 난동 부리는 남성을 제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	약 15분

※ 실감형 가상훈련의 참여인원은 2명임.

자료: 경찰청

- ☐ 확장현실 교육훈련과 실감형 가상훈련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많은 경찰관들이 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경험해 봄으로써 사건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확장현실 교육훈련장과 실감형 가상훈련 장비들은 2025년까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보급되었고, 2026년에는 시도경찰청에 확장현실 신규 교육훈련장을 구축하고 및 전국 259개 경찰서 중 지역에 가상현실 훈련 장비를 각각 2개씩 보급할 계획임.

○ 확장현실 신규 교육훈련장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콘텐츠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피드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미 구축된 훈련장만으로는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026년에 시범 운영과 신규 훈련장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연구개발 투자로 개발한 콘텐츠가 다양한 지역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이를 위해 경찰청은 시·도청 단위의 신규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의 수요를 파악했고, 시·도청 교육센터·현장실습센터·치안센터 등을 활용하여 여유 공간이 있고 각 시·도청에서 가까운 곳으로 후보지를 선정함.

○ 경찰청은 실감형 가상훈련의 실시 및 기기 도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요 조사는 없었지만 실감형 가상훈련은 혼란스러운 현장상황에서 누락하기 쉬운 각종 절차의 이행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의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임.

□ 다만, 확장현실 및 실감형 가상훈련은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모든 경찰관이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을 편안하고

진지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대하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교육 수단을 우선 배포한 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된 확장현실 교육훈련장은 실제 훈련을 실시한 사례가 저조하고, 확장현실 교육훈련과 실감형 가상훈련은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가상훈련 방식 역시 전국적 도입을 2026년 새롭게 시작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선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신규임용자 및 임용 1년 미만 경찰관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효과를 점검하고, 확장현실 교육훈련과 실감형 가상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훈련장 구축 및 가상훈련 장비를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경찰복지증진(7135-311)

-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마음동행센터를 1개소(상담사 1인)를 설치하여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마음건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이 마음건강증진 상담을 받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 경찰관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경찰서를 찾아가는 상담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관 복지증진(7135-311)은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순직·공상경찰관 예우·지원, 복지시설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834억 4,600만원 대비 44억 2,100만원 증액(5.3%)된 878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찰복지증진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경찰관 채용교육	74,346	83,446	87,867	4,421	5.3
·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4,463	4,690	4,875	185	3.9
· 전사순직경찰관 예우 및 지원사업	977	1,394	1,339	△55	△3.9
·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위원회 운영 등	25	25	25	-	-
·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46,841	54,713	58,718	4,005	7.3
· 경찰 임차관사 운영지원	5,510	5,654	5,764	110	1.9
· 경찰관 의료지원	12,050	12,138	12,314	176	1.5
· 경찰수련원 운영지원	3,225	3,338	3,338	-	-
·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지원	917	937	937	-	-
· 위험직무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338	557	557	-	-

※자료: 경찰청

(나) 정신건강 전문가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예방 사업의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경찰관에 대한 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찰 특화 전문 상담·치료기관인 마음동행센터 운영, 민간상담소 심리상담, 전문의 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48억 7,500만원으로 2025년 예산과 비교하여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마음동행센터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 세부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합계: 46억 9,000만원 ○ 마음동행센터 18개소 운영: 35억 3,900만원 · 상담사 1인 센터 운영비: 4억 4,100만원 (월 1,175만원×12개월×1개소) · 상담사 2인 센터 운영비: 27억 1,600만원 (월 1,617만원×12개월×14개소) · 상담사 3인 센터 운영비: 7억 4,100만원 (월 2,058만원×12개월×3개소) ○ 민간상담소 심리상담: 7억 2,000만원 (11만원×2,424명×2.7회) ○ 자살예방교육: 3억 3,800만원 · 자살예방 강사양성 2억 2,500만원 (100만원×225명) · 자살예방 보수교육: 1억 1,300만원 (50만원×225명) ○ 홍보물품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 워크숍 운영경비: 3,400만원	합계: 48억 7,500만원 ○ 마음동행센터 19개소 운영: 37억 3,900만원 · 상담사 1인 센터 운영비: 2억 8,200만원 (월 1,175만원×12개월×2개소) · 상담사 2인 센터 운영비: 27억 1,600만원 (월 1,617만원×12개월×14개소) · 상담사 3인 센터 운영비: 7억 4,100만원 (월 2,058만원×12개월×3개소) ○ 마음동행센터 증설 1개소: 4,400만원(검사장비 등 비품) ○ 민간상담소 심리상담: 7억 2,000만원 (11만원×2,424명×2.7회) ○ 자살예방교육: 3억 3,800만원 · 자살예방 강사양성 2억 2,500만원 (100만원×225명) · 자살예방 보수교육: 1억 1,300만원 (50만원×225명) ○ 홍보물품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 워크숍 운영경비: 3,400만원

□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마음동행센터, 민간상담소 등을 통해 경찰관에게 긴급심리지원, 지정상담, 자발적 검사, 힐링캠프 등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2024년에는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22,280명의 경찰관에게 48,433회의 심리지원을 실시함. 유형별로는 재난·인명사고에 노출된 경찰관에게 지원하는 긴급심리지원은 940회(828명), 격무부서 등에 대한 지정상담은 17,045회(14,558명), 자발적 상담은 29,928회(7,693명), 힐링캠프는 520회(425명)임.

○ 긴급심리지원과 지정상담은 상담사가 경찰관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것임. 자발적 상담은 경찰관이 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는 방식이고, 전문의 진료는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 전문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고 있음.

<2024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결과>

(단위: 명, 회)

구분	합계		긴급심리지원		지정상담		자발상담		힐링캠프		전문의 진료(치료)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합계	22,280	48,433	828	940	14,558	17,045	7,693	29,928	425	520	395	2,507
마음동행센터	16,923	38,197	293	404	11,227	13,833	6,170	23,440	425	520	341	2,073
민간상담소	5,359	10,236	535	536	3,331	3,212	1,523	6,488	-	-	57	434

자료: 경찰청, “2025년 경찰청 마음건강증진 계획”

-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기간 동안 전체 상담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해당 기간 동안 의무화 상담 중 긴급심리지원은 2025년에 많았고, 지정상담은 2023년에 많았음.

<2021년~2025년 9월 마음건강 증진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건, 회)

구 분	합 계		긴급심리지원		지정상담		자발상담		힐링캠프		전문의 진료(치료)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021년 합계	18,047	37,006	884	961	11,349	13,405	5,774	20,536	40	40	251	1,540
마음 동행센터	9,940	21,881	84	69	7,545	9,599	2,271	10,311	40	40	242	1,511
민간 상담소	8,107	15,215	800	892	3,804	3,806	3,503	10,225	-	-	9	29
2022년 합계	23,272	40,501	818	797	17,413	18,433	4,645	18,804	396	555	259	1,440
마음 동행센터	14,218	25,974	389	402	10,748	12,304	2,685	11,107	396	555	228	1,199
민간 상담소	9,054	14,527	429	395	6,665	6,129	1,960	7,697	-	-	31	241
2023년 합계	25,660	49,823	759	890	18,981	21,442	5,529	23,120	391	545	312	2,089
마음 동행센터	18,912	38,199	360	465	14,085	16,801	4,066	16,740	391	545	280	1,846
민간 상담소	6,748	11,624	399	425	4,886	4,641	1,463	6,380	-	-	32	243
2024년 합계	22,280	48,433	828	940	14,558	17,045	7,693	29,928	425	520	398	2,507
마음 동행센터	16,923	38,197	293	404	11,227	13,833	6,170	23,440	425	520	341	2,073
민간 상담소	5,357	10,236	535	536	3,331	3,212	1,491	6,349	-	-	57	434
2025년 9월 합계	17,725	37,355	2,008	2,088	10,427	12,257	5,096	18,927	194	243	411	2,071
마음 동행센터	13,261	29,843	731	927	8,199	10,134	4,137	14,795	194	243	340	1,638
민간 상담소	4,464	7,512	1,277	1,161	2,228	2,123	959	4,132	-	-	71	433

※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긴급심리지원이 가장 많은 원인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 인력 대상 긴급심리지원의 영향임
자료: 경찰청

- 현재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마음동행센터 18개소, 민간상담소 1,240개소, 협약병원 90개소 등 총 1,348개가 있음.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기관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마음동행센터	2	1	1	1	1	1	1	-	1	1
민간상담소	313	65	54	60	36	62	27	15	259	62
협약병원	15	8	5	6	3	2	2	-	7	4
계	330	74	60	67	40	65	30	15	267	67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마음동행센터	1	1	1	1	1	1	1	1	18	
민간상담소	24	23	47	33	30	44	65	21	1,240	
협약병원	6	4	4	2	2	5	13	2	90	
계	31	28	52	36	33	50	79	24	1,348	

자료: 경찰청

- 2024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따르면 18개 마음동행센터에서 전체 이용 48,433건의 78.9%인 38,197건의 상담 등이 실시됨. 2024년 기준 18개의 마음동행센터에 상담사 36명이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담사 1인당 연평균 1,000건 이상의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상담사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경찰청이 2023년 수립한 제3차 경찰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 및 2025년 경찰청 마음건강 증진 계획 등에 마음건강 관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찰청은 마음건강증진 인프라 확충을 주요한 정책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¹⁾

<마음동행센터 현황>

전국 마음동행센터 배치도	센터 현황			
	지역	협약병원	상담사 수	개소연도
	서울	보라매병원	2명	2014년
	서울	경찰병원	3명	2017년
	인천	인하대병원	2명	2019년
	경기북부	명지병원	2명	2019년
	경기남부	아주대병원	3명	2017년
	강원	강원대병원	2명	2018년
	대전	충남대병원	2명	2014년
	충북	청주의료원	2명	2019년
	충남	순천향대병원	2명	2019년
	광주	조선대병원	2명	2014년
	전북	예수병원	2명	2019년
	전남	목포중앙병원	2명	2019년
	대구	대구보훈병원	2명	2018년
	경북	안동성소병원	2명	2019년
	부산	부산보훈병원	3명	2014년
	울산	울산대병원	2명	2019년
	경남	한마음창원병원	2명	2019년
	제주	한라병원	1명	2018년

자료: 경찰청

□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해야 한다’는 인식의 영향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고, 상담·치료 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어 지원제도를 인지하더라도 이용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함. 이를 고려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1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5조임.

마음건강증진 상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전국 경찰관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경찰서를 찾아가는 상담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운영중인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중 상담사가 경찰서를 찾아가는 사업에는 긴급심리지원과 지정상담이 있음.
- 긴급심리지원 대상에는 타인의 죽음을 목격한 경우가 포함되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살인·변사 현장출동 건수는 연평균 57,675건이고, 해당 사건당 6인 이상의 직원(지역경찰, 형사, 감식요원)이 현장을 목격하는데, 해당 기간 긴급심리지원 인원은 평균 719명임.

<타인의 죽음 목격과 관련 긴급심리지원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살인·변사 현장출동(건)	과학수사요원 현장감식 건수	55,211	59,563	56,687	59,240	44,567
긴급심리지원 실시 인원(명)	타인의 죽음 목격	793	767	653	666	1,889

자료: 경찰청

- 또한, 긴급심리지원의 대상인 범인 피습 경찰관 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92명인데, 이 중 긴급심리 지원을 실시한 인원은 연평균 43명(평균 실시율 11%)임.

<직무수행 중 본인 위험·피해 관련 긴급심리지원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범인피습 부상 경찰관(명)	공상 경찰관 중 범인 피습	287	359	439	486	177
긴급심리지원 실시 인원(명)	직무수행 중 본 인 위험·피해	48	14	42	69	50

자료: 경찰청

- 지정상담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40대 경찰관은 지정상담 대상자 33,117명 중 18,228명(55%)이 상담을 실시했고, 50대 이상 경찰관은 지정상담 대상자 36,027명 중 11,241 (31.2%)가 상담을 실시함.

<지정상담 실시 현황>

대 상	진행기간	전체 인원 (2024년 기준)	진행 인원 (명)	비율(%)
40대 경찰관	2023년 6월 ~ 2024년 (19개월)	33,117	18,228	55.0%
50대 이상 경찰관(경감·경위급 등)	2022년 4월 ~ 2024년(33개월)	36,027	11,241	31.2%

자료: 경찰청

-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 사업 (2025년 기준 예산 47억원)의 내역사업 중 예방사업에 해당하는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의 예산이 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마음동행센터를 1개소(상담사 1인 센터)를 설치하여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전국 경찰관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현재 대상자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긴급심리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제협력관】

(1)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 경찰청은 해외치안협력강화 내역사업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내역사업 구분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코리안데스크와 단기파견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국제범죄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외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3133-311)은 마약범죄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재관 등을 파견하고 자국 및 요청국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여 범죄에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121억 1,100만원 대비 2억 300만원 증액(1.7%)된 123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해외치안협력강화	12,954	12,111	12,314	203	1.7
·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5,468	4,521	4,407	△114	△2.5
· 초국가범죄 공동 대 응 네트워크 강화	5,671	7,068	7,265	197	2.8
· 해외 주요사건 공조 수사 활동	520	522	642	120	23.0
· 체류외국인 범죄예 방 활동	931	-	-	-	-
· 외사사범 수사활동	364	-	-	-	-

※자료: 경찰청

(나) 내역사업 구분의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

□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사업은 종전의 외사경찰활동(3132-311) 사업과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이 통합되었음. 내역사업에는 (1)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네트워크 강화, (3) 해외주요사건 공조수사 활동이 있음.

○ 내역사업인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내역사업인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네트워크 강화는 아래 표와 같이 내내역사업과 내내내역사업 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내역사업인 해외주요사건 공조수사 활동은 아래에 1단계가 더 있음.

<2026년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의 내역 사업 현황>

내역사업 (예산)	내내역사업 (예산)	내내내역사업 (예산)
1.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 44억 700만원)	1-1)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 (예산: 17억 7,000만원)	① 해외 경찰주재관 등 교체여비 (예산: 8억 7,100만원) ② 해외 경찰주재관 등 공동운영비 (예산: 6,100만원) ③ 해외파견 경찰협력관 운영비 (예산: 7억 100만원) ④ 직무파견 경찰주재관 운영비 (예산: 9,700만원) ⑤ 경찰주재관 등 교육·회의 (예산: 4,000만원)
	1-2) 국제협력경찰 운영 (예산: 2억 3,600만원)	① 국제협력요원 역량강화 (예산: 7,000만원) ② 국제협력 자문협의회 운영 (예산: 3,000만원) ③ 국제협력 경찰 운영지원 (예산: 1억 3,600만원)

내역사업 (예산)	내내역사업 (예산)	내내내역사업 (예산)
	1-3) 정보보안비 (예산: 19억 5,200만원)	
	1-4) 외국경찰 대상 마약범죄 등 대응역량강화 교육훈련 (예산: 4억 1,600만원)	① 선진치안시스템 전수 지원 (예산: 3억 1,600만원) ② 한아세안 국제범죄수사 역량강화 (예산: 1억원)
	1-5) 외국 법집행기관 선진 교육연수 (예산: 3,200만원)	① 외국 법집행기관 교육 프로그램 참석 (예산: 600만원) ② 외국경찰 선진경찰제도 연수 (예산: 2,600만원)
2.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네트워크 강화 (예산: 72억 6,500만원)	2-1) 국제치안 협력활동 (예산: 1억 6,300만원)	① 주요 협력국가 고위급 회담 (예산: 3,000만원) ② 치안분야 주요 정책회의 참석 (예산: 1,100만원) ③ 주요 협력국가 경찰협력회의 (예산: 1,100만원) ④ 외국경찰 등 협력관리 운영 (예산: 4,500만원) ⑤ 데이터이용료 (예산: 1,700만원)
	2-2) 인터폴 국제공조활동 (71억 200만원)	① 인터폴 분담금 납부 (예산: 42억 7,000만원) ② 인터폴 펀딩을 통한 글로벌 금융범죄 대응 (예산: 15억 3,200만원) ③ 인터폴 총회 및 국장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예산: 5,600만원) ④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운영 (예산: 2,800만원) ⑤ 인터폴 합동단속작전 회의 (예산: 1억 5,600만원) ⑥ 국제공조시스템 범정부 공동활용 (예산: 9억 7,000만원) ⑦ 인터폴 전용통신망 유지보수 (예산: 9,000만원)
3. 해외주요사건 공조 수사 활동 (예산: 6억 4,200만원)		①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예산: 5억 6,800만원) ② 마약·보이스피싱 등 해외거점 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 (예산: 7,400만원)

- 내역사업인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내역사업인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네트워크 강화는 그 내역사업 명칭만으로는 어떤 사업을 포함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치안 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이 단순하게 구성된 2021년의 분류¹²⁾를 참고하면, 해외치안 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을 ① 해외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파견, ② 국제회의, ③ 인터폴 분담금, ④ 인터폴 인프라 활용, ⑤ 아세안 등 협력, ⑥ 국제공조 활동, ⑦ 국제협력경찰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당 분류를 기준으로 2021년 예산부터 2026년 예산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12) 2021년 해외치안협력강화 내역사업 구성

- ① 해외 경찰주재관 등 교체여비
- ②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
- ③ 선진 치안시스템 전수 지원
- ④ 국제치안협력 활동
- ⑤ 인터폴 분담금 납부
- ⑥ 국가중앙사무국 인터폴 국제공조활동
- ⑦ 인터폴 총재 활동 지원
- ⑧ 인터폴 국제범죄 공조회의
- ⑨ 2021 국제 경찰청장회의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 세부 내역[2021년~2026년(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안)
해외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파견	해외 경찰주재관 등 교체 여비	553	661	871	871	871	871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	1,034	1,035	1,034	667	667	628
	코리안데스크 운영비 인터폴 협력관 운영비 직무파견 주재관 운영비 해외 경찰주재관 등 공동운영비 해외파견 경찰관 안전장비 경찰주재관 등 교육·회의**	476	477	476	229	229	①*
		256	256	256	255	255	②*
		217	217	217	98	98	97
		78	78	78	78	78	54
		7	7	7	7	7	7
		-	-	-	-	-	40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단기 파견	-	269	269	269	269	③*
국제 회의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치안협력 활동	169	151	151	216	189	206
	국제협력 주요 국제회의 외국 선진경찰 제도 연수 인터폴 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 대테러 주요 국제회의 국제범죄 대응강화 회의 국외출장시 데이터이용료	42	42	42	101	101	101
		26	26	26	32	32	32
		55	55	55	55	55	56
		28	28	28	28	-	-
		18	-	-	-	-	-
		-	-	-	-	-	17
	국제 경찰청장회의	400	-	560	-	598	-
	인터폴 총재 활동 지원	179	-	-	-	-	-
	인터폴 국제범죄 공조회의	156	156	156	156	156	156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안)
인터폴 분담금	인터폴 분담금 납부	1,591	1,630	2,577	2,577	3,784	4,270
	인터폴 펀딩을 통한 글로벌 금융범죄 대응**	-	-	-	-	-	1,532
인터폴 인프라 활용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운영	29	29	29	29	28	28
	국제공조시스템 범정부 공동활용	-	-	-	-	-	970
	인터폴 전산망 개방·확대	-	-	-	-	398	-
	인터폴 전용통신망 유지 보수**	-	-	-	-	-	90
아세안 등 협력	선진 치안시스템 전수 지원	385	451	502	386	386	316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 역량 강화	100	100	100	100	100	100
국제 공조 활동	국가중앙사무국 인터폴 국제공조활동	390	389	389	449	448	568
	도피사범 송환 출장	265	265	266	307	307	357
	외국 사법기관 국제공 조수사	84	84	82	82	82	151
	외국경찰 국내호송 및 국 내입국 공동조사 지원	41	41	41	41	41	42
	외국 사법기관 네트 워크 구축	-	-	-	19	19	19
	보이스피싱 등 해외거점 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	-	-	147	74	74	74
국제협력 경찰 운영**		-	-	-	-	-	236

* 표의 ① ② ③ 항목 수치의 합계는 701임.

** 경찰주재관 등 교육·회의, 국제협력경찰 운영, 인터폴 펀딩을 통한 글로벌 금융범죄 대응, 인터폴 전용통신망 유지 보수는 외사경찰활동(3132-311)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임.

○ 해외치안 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 구성을 위의 표 등과 같이
단순하게 구성하여 내역사업의 명칭으로 사업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사업 분류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은 2024년 129억 5,400만원을 집행했고,
2025년 예산은 121억 1,100만원 중 107억 7,683만원을 집행함.¹³⁾

□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파견과 관련하여 경찰 주재관은 34개국에
68명 파견하고 있음. 코리안데스크 등 경찰협력관은 6개국
7개소¹⁴⁾에 파견하고 있음.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단기 파견¹⁵⁾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명~4명을 파견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도피사범을 검거·송환함.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단기 파견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파견국 및 파견인원	중국 2명 캄보디아 1명 태국 1명	태국 2명 베트남 1명 프랑스 1명	태국 2명 네덜란드 1명	태국 2명 네덜란드 1명

자료: 경찰청

13) 2025년 10월 30일 기준

14) 코리안데스크 등 경찰협력관 현황

국 가	근무인원	설치연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마닐라 1명, 앙헬레스 1명, 세부 1명	2012년
태국 경찰청	1명	2022년
태국 마약통제청	1명	2023년
베트남 코리안데스크	없음(베트남公安)	2015년
캄보디아 대사관	1명	-
인터폴 프랑스	2명	-
인터폴 싱가포르	1명	-

15)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단기 파견의 연간 예산 2억 6,900만원임.

○ 코리안테스크와 단기과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다수의 국제 범죄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제공조활동 중 보이스피싱 등 해외거점 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은 2025년 9월말 기준 예산 7,4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여 검거작전을 40회 실시하고, 첩보검증 출장을 29건 실시했으며, 잠복수사관을 34회 동원함.

<보이스피싱 등 해외거점 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 예산 집행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말
해외거점 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		·예산: 1억 4,700만원 ·집행액: 1억 1,568만원	·예산: 7,400만원 ·집행액: 7,302만원	·예산: 7,400만원 ·집행액: 4,800만원
	검거작전시 해당국 법집행기관 차량 임차료	·예산: 6,000만원 ·집행액: 3,900만원	·예산: 3,000만원 ·집행액: 2,900만원 ·검거작전 건수: 29건 (필리핀 18건 등)	·예산: 3,000만원 ·집행액: 2,000만원 ·검거작전 건수: 40건 (필리핀 24건, 태국 8건 등)
	첩보검증 출장	·예산: 4,400만원 ·집행액: 4,000만원	·예산: 2,200만원 ·집행액: 2,200만원 ·첩보검증 출장 건수: 25건(필리핀 18건 등)	·예산: 2,200만원 ·집행액: 1,400만원 ·첩보검증 출장 건수: 29건(필리핀 20건, 태국 9건 등)
	검거작전을 위한 해당국 잠복 수사관 동원비	·예산: 3,600만원 ·집행액: 3,000만원	·예산: 1,800만원 ·집행액: 1,800만원 ·잠복수사관 동원 건수: 26건(필리핀 24건, 태국 2건 등)	·예산: 1,800만원 ·집행액: 1,200만원 ·잠복수사관 동원 건수: 34건(필리핀 15건, 태국 10건 등)
	네트워크 구축비	·예산: 700만원 ·집행액: 700만원	·예산: 400만원 ·집행액: 400만원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집행	·예산: 400만원 ·집행액: 200만원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집행

자료: 경찰청

- 그리고 인터폴 국제공조활동은 2025년 예산 4억 4,800만원 중 4억 200만원을 집행하여 국외 도피사범 송환 업무를 수행함.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예산 집행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도피사범 송환 출장	· 예산: 2억 6,500만원 · 집행액: 2억 200만원	· 예산: 2억 6,560만원 · 집행액: 2억 6,411만원	· 예산: 2억 6,560만원 · 집행액: 2억 6,528만원	· 예산: 3억 655만원 · 집행액: 3억 2,400만원	· 예산: 3억 655만원 · 집행액: 3억 267만원
외국 사법기관 국제공조 수사	· 예산: 8,400만원 · 집행액: 6,115만원	· 예산: 8,249만원 · 집행액: 8,229만원	· 예산: 8,249만원 · 집행액: 8,195만원	· 예산: 8,203만원 · 집행액: 8,164만원	· 예산: 8,203만원 · 집행액: 7,077만원
외국 경찰 국 내호송 및 국 내입국 공동조 사 지원	· 예산: 4,100만원 · 집행액: 2,230만원	· 예산: 4,100만원 · 집행액: 4,050만원	· 예산: 4,100만원 · 집행액: 3,843만원	· 예산: 4,117만원 · 집행액: 4,100만원	· 예산: 4,069만원 · 집행액: 3,851만원
외국 사법기관 네트워크 구축	-	-	· 예산: 1,875만원 · 집행액: 1,875만원	· 예산: 1,875만원 · 집행액: 1,875만원	· 예산: 1,875만원 · 집행액: 1,619만원
합 계	· 예산: 3억 9,000만원 · 집행액: 2억 8,500만원	· 예산: 3억 8,900만원 · 집행액: 3억 8,700만원	· 예산: 3억 8,900만원 · 집행액: 3억 8,600만원	· 예산: 4억 4,900만원 · 집행액: 4억 4,700만원	· 예산: 4억 4,800만원 · 집행액: 4억 200만원

자료: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1) 경찰청 R&D 연구관리전문기관: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 과학치안진흥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별도 기관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합기평비(평균 2%)가 아닌 사업별 기획평가관리비(3.8%)를 편성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사업별 적정 기평비 편성을 위한 자체 기준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관운영비 확보 및 통합기평비 전환 노력이 필요함.

(가) 개 요

- ‘과학치안진흥센터¹⁶⁾(이하 ‘KIPoT’)'는 2021년 1월 경찰청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23년 6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경찰청 고시(제2023-3호)를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치안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기획·관리·운영·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26년도 경찰청 R&D 예산안은 총 682억 1,200만원이며, 이 중 기획평가관리비(이하 ‘기평비’)로 26억 2,700만원(3.8%)이 편성되었음. 이는 주요 부처 전문기관의 평균 수준(약 2%)을 상회하는 편성 비율임.

16) 과학치안진흥센터는 2021년 1월 12일에 경찰청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소장실 포함 4개 부서 19명으로 구성되었고, 2023년 6월에 경찰청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었음.

<2026년도 R&D 예산안 편성>¹⁷⁾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			
	예산액	연구 개발비	기평비	기평비 비율(%)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2.0)	2,907	2,907	0	-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개발	3,068	2,950	118	4.0%
자율주행 기술 개발혁신사업 ¹⁸⁾	14,454	13,725	729	5.3%
경찰장비 개선	2,548	2,450	98	4.0%
과학치안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시범사업	1,440	1,440	0	-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기술 개발	4,483	4,311	172	4.0%
사이버수사 지원기술 개발	8,736	8,400	336	4.0%
미래치안 도전 기술 개발	1,383	1,330	53	4.0%
경찰건강 스마트 관리	6,562	6,310	252	4.0%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	4,932	4,742	190	4.0%
과학기술 기반 군중밀집관리 기술 개발	1,976	1,900	76	4.0%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3.0)	2,494	2,400	94	3.9%
차세대 지능형 순찰 플랫폼 개발	3,465	3,332	133	4.0%
사이버범죄 수사단서 통합 분석 및 추론 시스템 개발	6,136	5,900	236	4.0%
경찰 작전능력 향상기술 개발	1,248	1,200	48	4.0%
치안 데이터 활용 기술개발	1,560	1,500	60	4.0%
치안 신산업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	820	788	32	4.1%
총계	68,212	65,585	2,627	3.8%

※ 자료: 경찰청

17) 과거 경찰청 R&D 세부사업별 기평비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 3.83%~4.5%, 2024년 2.0%~4.2%, 2025년 2.45%~4.2% 수준이며, 경찰청은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 적용하였다는 입장임.

18) 경찰청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다부처(산업부·과기부·국토부) 사업으로 연계 협력 지원이 필수로 요구되어 범부처 협의체 운영, 기술교류 추진 등이 필요하고, 개별 과제의 연구성과 통합·연계 및 테스트 실증과 △현장 지원 및 운영 △유지관리 △연계 협력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에 비해 기평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기획평가관리비 편성 기준 마련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19)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정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관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획·평가·관리 예산(이하 ‘기평비’)이 책정되어야 함. 그러나 부처별 전문기관 유형과 재정 구조가 상이하여 기평비 산정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기관에서는 기평비가 기관운영비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존재함.
- 이에 정부는 기평비 편성 범위와 목적별(기획·평가·관리·인건비·간접비 등) 기준 마련, 부처별 현황 파악 및 총량 관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2년 통합기평비 제도를 신설하였음. 통합기평비는 기존의 사업별 기평비를 기관별·회계별로 통합 편성하여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 전년도 실적행 예산을 기준으로 경직성 경비(인건비·간접비)와 비경직성 경비(기획·평가·관리)를 구분하여

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차년도 기평비를 산출하는 구조임.

- 다만, 기평비 관련 구체적인 편성 지침이나 기준은 여전히 미비함.
특히 법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 기관운영비 편성이 어려워, 일부 기관은 통합기평비 대신 사업별 기평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7개 주요 전문기관은 모두 기관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으며, 평균 2%(0.6~3.9%)대의 통합기평비를 편성하고 있음.

<'25년 기준 주요 전문기관의 재원구조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명	전문기관 유형	관리 R&D 사업 예산	기관 운영비	기관고유 사업비	통합 기평비 시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정기관	9,571 억원	O	O	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법정기관	1조 4,722 억원	O	O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법정기관	5,154 억원	O	O	O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법정기관	4,595 억원	O	O	O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법정기관	3조 3,407 억원	O	O	O
한국연구재단	법정기관	4조 3,576 억원	O	O	O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공기관	1조 5,225 억원	O	O	O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공공기관	7,418 억원	O	O	O
과학치안진흥센터	비영리 재단법인	616.08 억원	X	X	X

※ 자료: 경찰청

- 반면,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별도의 기관운영비 없이 기평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예산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2026년 기준 평균 3.8%)의 기평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2026년 예산안 기준 KIPoT의 기평비는 총 20억 7,8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간접비 등 센터 운영비는 약 10억 6,100만원(51.1%)을 차지함.
- 경찰청은 인건비의 경우 KIPoT에 직접 상주하며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를 하는 인력에 대한 것으로, 통합기평비 신설 전 다른 전문기관의 인건비·간접비 비중(51.7%)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나 기평비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와 간접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점검이 필요함.

<최근 5년간 KIPoT 기평비 중 센터 운영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기평비 총액	3.56	9.44	10.99	15.58	20.78
센터 운영비 (인건비, 간접비)	2.34	6.03	7.49	8.68	10.61
비율(%)	65.7	63.9	68.2	55.7	51.1

※ 자료: 경찰청

□ 또한, 기평비는 사업 성격, 규모, 관리, 복잡성 등에 따라 사업별 기평비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2026년 경찰청 R&D 예산안에 따르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4% 요율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대행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기관은 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도 법적 근거에 따라 자체적인 기평비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목적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거치고는 있으나, 사업별로 일률적인 요율(4%)을 적용하는 것은 기평비의 합리적 편성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특히 경찰청 R&D 예산이 2015년 22억 원에서 2025년 64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 관리 난이도, 인력 투입 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기평비 산정기준을 검토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전문기관 안정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보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KIPoT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별도 기관운영비가 없고, 경찰청 R&D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운영의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임.
- 경찰청의 R&D 예산 및 과제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KIPoT 연구인력 1인당 관리 과제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경찰청 R&D 예산은 2015년 22억 원에서 2025년 640억 원으로 약 29배 확대되었으며, 사업 수도 1개에서 17개로 증가함. 이에 따라 연구인력 1인당 관리 세부사업 수는 2021년 0.29개에서 2025년 1.07개로 증가하여, 관리업무의 과중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최근 6년간 KIPoT 연구인력 1인당 관리 세부사업 수 추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관리 세부사업 수(개)	2	4	7	13	16	16
연구인력 수(명)	7	9	12	16	15	16
1인당 세부사업 수(개)	0.29	0.44	0.58	0.81	1.07	1.0

※ 자료: 경찰청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2024년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전문기관의 연구인력 1인당 평균 관리사업 수는 0.34개(2023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KIPoT은 0.58개로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2025년에는 약 1.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주요 전문기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업무 부담으로, 개별 연구원의 과제관리 효율성 및 기획·평가 업무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전문기관별 연구인력 1인당 관리사업 수 비교(2023년 기준)>

(단위: 개/명)

기 관 명	1인당 관리사업 수
한국연구재단	0.35
정보통신기획평가원	0.3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3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1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6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6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94
과학치안진흥센터(2023년)	0.58
평균	0.34
과학치안진흥센터(2025년)	1.0('25년 기준)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경찰청

- 또한, 인력 구성 측면에서도 전문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KIPoT 연구진 17명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9명(52.9%)으로, 박사급 인력 비중이 낮아 고급 연구 관리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인력구조는 기관운영 재원 불안정성과 맞물려 전문인력 유치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²⁰⁾

<KIPoT 연구진 전문성 현황>

구 분	인원(명)	비율(%)
전체 연구진	17	100.0
R&D 관련기관 경력 보유자	17	100.0
전문기관 경력 보유자	16	94.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9	52.9

※ 자료: 경찰청

- 한편, 다수의 전문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연구자·전문가·부처 담당자 등 수요자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KIPoT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경찰청 R&D 예산과 사업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KIPoT의 과제관리 및 기획·평가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기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2명이 퇴사하고 신규 충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부담과 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은 전문인력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종합적으로, 경찰청은 단기적으로 사업별 기평비의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의 지위 및 재원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관운영비를 별도 확보하거나, 타 전문기관과 유사한 통합 기평비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전문인력 확보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경찰건강 스마트관리(R&D)(4431-715)

- 「경찰건강 스마트관리」 사업의 주요 기술인 웨어러블센서기술은 이미 민간 부문에서 높은 기술 성숙도로 상용화되어 심혈관계질환 예방에 활용되고 있으며, 경찰관의 뇌 심혈관계질환 위험은 야간근무라는 근무형태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므로, 여타 직군의 유사 연구결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개발 중인 다바이스가 향후 유사 직군에서도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완성도를 높여 다각적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건강 스마트관리' 사업(R&D)은 AI, IoT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경찰관의 뇌심혈관계질환을 예측·예방하고, 생활습관·근무형태 등에 따른 개인별 건강정보를 분석·관리하기 위해 경찰청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97억 4,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64억 9,000만원 대비 7,200만원 증액(1.1%)된 65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찰건강 스마트관리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경찰건강 스마트관리	4,636	6,490	6,562	72	1.1

※ 자료: 경찰청

<경찰건강 스마트관리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세부 사업명	경찰건강 스마트관리(R&D)
내역 사업명	IoT, AI 기반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 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목표	경찰 인적자원의 개인별 생애주기 건강정보 통합 관리 및 현장 경찰관들의 실시간 생체정보를 활용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방안 및 근무관리 시스템 구현으로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을 유지하고 치안서비스 강화 도모
사업내용	질병, 생활습관, 근무형태 등에 따른 경찰관 개인별 생애주기 의료·건강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현장 경찰관의 생체정보를 활용, 건강한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 유지·달성 가능한 IoT, AI 기반 건강정보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수행기간	2022년~2026년(5년)
개발예산	총 297.4억원
연구내용	▶(1세부) 경찰 건강관리 통합플랫폼(폴라이프) 시범운영 및 JEM ²¹⁾ 구축
	▶(2세부) 뇌심혈관질환 예측기술 개발을 위한 코호트 구축 및 특화 검진
	▶(3세부) 상용 웨어러블 기기 활용 라이프로그 기반 스트레스 케어 기술
	▶(4세부) 자체 전용 웨어러블 기기 기반 맞춤형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 자료: 경찰청

21) JEM(Job Exposure Matrix, 직무-노출 매트릭스)는 잠재적 건강위험인자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는 도구로, 직무와 근무환경을 기반으로 질병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됨.

(나)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사후 관리 방안 검토 필요

□ 본 사업은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6년 최종연도를 앞두고 당초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민간 상용 제품 대비 자체 개발 웨어러블 기기의 차별성 및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웨어러블센서기술은 이미 민간 부문에서 높은 기술 수준으로 상용화되어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에 활용되고 있음.²²⁾ 실제로,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는 혈압·심전도·체성분·혈중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애플의 애플워치도 심전도·체온·혈중 산소포화도·수면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²³⁾

□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 사업이 이미 상용화된 삼성 갤럭시 워치를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경찰관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자체 웨어러블 기기 개발²⁴⁾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기에, 전용 웨어러블

22) ㈜삼성전자, Apple Inc.은 웨어러블센서기술을 활용한 상용품을 판매중임.

○ (삼성-갤럭시워치) 혈압, 심전도, 황산화지수, 체성분, 체온·피부온도센서, 혈중 산소포화도 등 측정
○ (애플-애플워치) 심전도, 체성분, 체온·피부온도 센서, 혈중 산소포화도, 수면 모니터링 등 측정

23) 이러한 상용 기기들의 심혈관질환 탐지 성능에 대해서는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Apple Heart Study에서는 419,297명을 대상으로 애플워치를 활용한 심방세동 탐지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2022년 Sensors에 발표된 Sedlacek 등의 연구에서는 삼성 스마트워치의 심박수 및 심박변이도 측정 정확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

24) 경찰청은 상용 웨어러블과 차별화된 자체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으로 ① 심전도 파형 등 원본 생

기기가 상용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함을 해소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자체 개발 웨어러블 기기의 성능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인인증을 획득하고 추가 임상시험 데이터를 확보하여, 향후 상용화 추진을 위한 명확한 성과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경찰관의 뇌심혈관질환 위험은 야간근무라는 근무형태에 기인하는 측면이 커 경찰관만의 특수성이라기보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경찰청은 한양대 연구(2015)를 인용하여 경찰관의 허혈성 심질환이 일반공무원 대비 2배, 심근경색 4배 높다고 주장하나, 여러 연구²⁵⁾에서 야간근무와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 의학적 사실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소방·의료·제조 등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나타남.

□ 실제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도 2015~2019년 5년간 3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형 소방활동 지원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코호트 추적을 통한 소방

체신호(raw data) 직접 수집·분석을 통한 경찰관 맞춤형 알고리즘 개발, ② 별도 보정기구 없는 혈압 자동보정 및 실시간 혈당변이도 모니터링, ③ 전문 측정 프로토콜 기반 투명한 수면분석 정확도 제공, ④ 심박변이도·움직임·체온 등 다변인 활용 개인 맞춤형 스트레스 정량 측정 등을 설명하고 있음.

25) Park 등이 PLoS One에 발표한 연구(2015)와 Sung 등이 직업환경의학회지에 발표한 연구(2025)

공무원 신체·정신적 질병 원인 파악, 직무특성·건강진단자료의 빅데이터화 및 분석 등을 수행하였음. 경찰청 사업(297억 4,000만원)은 소방청 사업 대비 약 7.9배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두 직종 모두 야간·교대근무와 긴장된 업무 수행이라는 공통점을 고려할 때 향후 후속 개발 관련하여 부처 간 중복 투자 방지 및 성과 공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행 성과지표는 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경찰청이 제출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① 경찰관 의료·건강 DB 구축(9만건), ② 경찰관 특화 코호트 구축(4,000건), ③ 플랫폼 서비스 만족도(75점), ④ 논문 영향력 지수, ⑤ 웨어러블 디바이스 공인인증 획득(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R&D 연구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기술적 지표들에 해당하며, 이 지표들이 R&D 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성과지표라 하더라도 사업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인 ‘경찰관 뇌 심혈관질환 예방 및 돌연사 감소’라는 성과의 달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임.

□ 이에, 본 사업 종료 이후 경찰청에서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물을 도입할 경우, ‘경찰관 뇌 심혈관질환 조기발견’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28년 경찰병원 의료연구복합센터로 통합 플랫폼을 이관하여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이관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관 이후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활용 주체와 체계적 관리·지원, 후속 연구 등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추적·평가할 수 있는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본 사업의 주된 목표가 질환의 치료가 아닌 예측·예방인 만큼, ① 개발 기술·기기의 의료기기 성능 수준 인증 확보 및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 ② 사업 성과물 도입 시 실질적인 효과성 분석을 통해 궁극적인 사업 목표 달성, ③장기적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민간 기술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민간·공공에서 수집·구축된 유사 직군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찰관뿐만 아니라 야간근무 등 유사한 근무형태의 직업군에게도 동 사업의 성과가 확대·도입·상용화될 수 있도록 예측 모델 고도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미래치안기반조성(7132-311)

-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정책적 성격이 강하고 민간투자 유치에 쉽지 않은 분야이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차별화된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기존 정책펀드와의 중복성 해소, 펀드 조성 일정의 현실화, 투자→실증→조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등 사전 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됨.

(가) 개 요

- 미래치안기반조성(7132-311) 사업은 정책연구용역, 국제치안산업대전, 직무발명 활성화, 치안산업 운영,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지원, 국민안전산업펀드 등 6개 세부사업을 통해 치안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22억 3,500만원 대비 52억 9,000만원 증액(236.6%)된 75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미래치안기반조성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미래치안기반조성	2,231	2,235	7,525	5,290	236.6

※자료: 경찰청

(나) 국민안전산업펀드 결성지연 우려 및 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필요

□ ‘국민안전산업펀드(이하 안전산업펀드)’는 비교적 영세하고 자금 접근성이 낮은 국내 치안·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현실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운용하는 정책펀드²⁶⁾(경찰청·행안부 공동)로, 투자 전문 운용사(Venture Capital, Accelerator)²⁷⁾의 역량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첨단기술 기반 기업의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성장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정책자금(정부)과 민간자금의 비율을 각 50%로 설정하여 연간 총 200억원 규모로 편성(경찰청 50억원, 행안부 50억원, 민간 100억원) 하였음.

<국민안전산업펀드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결성 목표	총 200억원(경찰청 50억원, 행정안전부 50억원, 민간 100억원)
투자대상	- 첨단기술 기반 국민안전산업 분야 창업기업, 기술사업화 및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 ※ 기업 현황(‘23년) : △치안산업 14,189개 △재난안전산업 88,810개 △소방산업 9,212개

26)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의 재간접펀드를 의미함.

27) Venture Capital :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회사 / Accelerator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등록된 법인

구 분	주요 내용
출자비율	정부 50%(경찰청 50억원, 행안부 50억원), 민간 50%(100억원)
주목적투자비율	국민안전산업 분야에 60% 이상 투자, 나머지 40%는 기타 기업 투자
운용기간 등	8년(4년 투자, 4년 회수), 기준수익률: 3% 설정
운용주체	한국벤처투자를 통한 모펀드-자펀드 구조(Fund of Funds)

① 민간투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안전산업펀드는 경찰청·행안부 공동 출자로 총 200억원 규모를 조성하며, 정부 50%, 민간 50%의 출자비율을 설정함. 정책적 목적이 강하고 시장성이 제한적인 치안산업 특성상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기대는 낮아 실제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을 수 있음.

<국민안전산업펀드의 민간투자 유치 제약요인>

구 분	내 용	민간투자 유치 영향
시장 특성	공공조달 중심, 제한적 민간시장	수익성 불확실 → 투자 기피
기준수익률	3%	타 정책펀드(1% 이하 66개) 대비 높으나 시장금리 수준
주목적투자비율	60%	정책 목적 강할수록 민간 참여 저조
투자 경험	치안산업 투자 운용사 부족	전문성 부족 → 참여 주저
Exit 경로	공공조달 연계 방안 불명확	투자 회수 불확실성 ↑

※ 자료: 경찰청

□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2024.11)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결성된 중소기업모태펀드와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자펀드 중 기준수익률이 1% 이하인 자펀드가 중소기업모태펀드 46개,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한정적인 투자환경을 감안하여 운용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것²⁸⁾으로, 정책적 목적이 강하고 시장성이 제한적인 분야일수록 민간 출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²⁹⁾

<치안산업 기업 규모별 분포 현황 (2023년 기준)>

기업 규모	기업 수(개)	비중(%)	평균 매출액(억원)	평균 종사자 수(명)	평균 자본금(억원)
대기업 (300명 이상)	368	2.6	445.0	846	268.2
중기업 (50~299명)	1,528	10.8	77.8	107	40.4
소기업 (50명 미만)	12,293	86.6	7.7	15	6.4
합계	14,189	100.0	26.6	46	16.9

*자료: 경찰청

28) 기준수익률(3%)을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 달성분의 20%는 펀드운영사(Venture Capital)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나머지 80%는 투자비율에 맞게 배분(정부 40%, 민간 40%)

29)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안산업 기업 14,189개 중 소기업(50명 미만)이 12,293개(8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매출액은 7.7억원, 평균 자본금은 6.4억원에 불과하여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치안산업 매출액>

(단위: 억원)

합 계	치안 관련 제품 제조업	치안 관련 제품 도매 및 소매업	치안 관련 건축 · 시설 설계 및 공사업	치안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정보제공업	치안 관련 단체	그 외 치안 관련 서비스업
378,687	90,794	19,014	32,216	39,252	3,297	194,113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실질적인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출자 의향서(LOI) 사전 확보, 치안산업 투자 경험 보유 운용사 발굴, 기준수익률 3% 수준에서의 실질적 민간 참여 의향 확인 등을 통해 민간자본 100억원 유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펀드 결성 실패 또는 투자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³⁰⁾

30) 경찰청은 현재까지 동 펀드 운용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벤처투자에서 작성한 공통 지침이 있으나, 한국벤처투자에서는 아직 모태펀드에 편입되지 않은 만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임. 펀드 운용 관련 연간 시행계획은 올해(2026년) 11월 중 작성예정이라고 밝힘.

② 기존 정책펀드와의 중복성 검토 필요

□ 치안산업은 일반적인 벤처·중소기업 지원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치안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공공목적을 가지며 주요 수요처가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높은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실증, 판로확보에 있어 장벽이 높고 민간투자의 수익 기대치가 낮아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또한 국내 치안시장은 공공조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일반 민간시장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우리나라의 정책펀드는 모펀드, 부처별 출자계정, 자펀드 등 다층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목적과 투자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³¹⁾

국민안전산업펀드는 모펀드 내 출자계정 수준에서 조성될 예정이나,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계정·혁신모험계정·청년계정(창업기업 지원), 특허청 특허계정(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기업 지원) 등과 투자 목적 및 지원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31) 정책펀드의 다층적 구조란 1단계 모펀드(한국벤처투자 등이 운용) → 2단계 부처별 출자계정(중기부 계정, 경찰청 계정 등) → 3단계 자펀드(민간 운용사가 실제 기업에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말함. 이러한 구조에서 각 부처가 유사한 목적(예: 창업기업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별도 계정을 만들면서 투자 대상 기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국모태펀드 내 유사 계정 및 타 부처 정책펀드 현황>

부처/계정명	주 출자분야	중복 가능성
[한국모태펀드]		
중진계정	창업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 등	창업초기 중복
혁신모험계정	청년창업기업	창업기업 중복
청년계정	창업초기기업·혁신성장기업	창업초기 중복
특허계정	특허기술사업화 기업	기술사업화 중복
연구개발특구계정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기술기업 중복
[타 부처 펀드]		
산업부 공공기술 창업펀드	7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기업 중복
산업부 CVC 스케일업 펀드	로봇, 첨단제조 등 첨단전략기술	첨단기술 중복
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 등	AI·로봇 중복
과기부 AI 혁신펀드	AI기반 기술, AI 응용서비스 기업	AI 기술 중복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괄)」, 2024.11 재인용;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경찰청의 사업계획서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펀드 운용방안이나 기존 펀드와의 차별화 전략이 제시되지 않았음. 치안분야 전문성을 갖춘 운용사 선정 기준, 공공조달 연계 방안, 기존 정책펀드와의 명확한 투자 대상 구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펀드를 운용할 경우 실질적인 치안산업 육성 효과 없이 형식적인 펀드 운용에 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찰청은 기존 정책펀드와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야 함. 투자대상의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를 통해 펀드의 법적 성격, 투자 범위, 지원 대상, 운영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³²⁾

③ 펀드 조성 일정의 현실성 및 성과관리 체계 검토 필요

- 경찰청은 2026년부터 국민안전산업펀드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성 일정의 현실적 검토가 필요함.

- 경찰청은 한국벤처투자 자료를 근거로 운용사 선정 후 3개월, 자펀드 결성에 운용사 선정 후 6개월 등 총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³³⁾ 치안산업 펀드는 첨단치안·재난안전 분야의 업력이 짧고 시장 평가가 불확실하여 민간자본 유치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치안산업진흥법 등 관련 근거법 심사와 연동될 경우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정책 목적(공공성)과 시장성(수익성) 균형을 맞추는 약정 조건 협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 조성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32) 경찰청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출자 가능 근거일 뿐 치안산업 육성의 정책적 기반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임.

33) 모태펀드 자펀드의 결성 기간은 2020~2023년까지 통상 9~1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2024년에는 5개월 내로 결성.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운용사 선정 시 ‘민간 출자자 모집 실적’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결성 시한 연장 제한과 조기 결성 인센티브 강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평가됨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년 벤처투자 11.9조원·펀드결성 10.6조원」, 2025.2.11 발표>).

<경찰청 계획상 정책펀드 조성 소요기간>

단 계	소 요 기 간	비 고
운용사 선정	공고 후 3개월 내외	제안서 접수 및 심의
자펀드 결성	운용사 선정 후 6개월 내외	민간 출자자 모집 포함
총 소요기간	공고 후 8개월	일반 모태펀드 기준

*자료: 경찰청

- 또한, 주목적 투자대상이 한정적인 환경에서 민간투자 유치에 위해서는 공공조달 연계 방안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펀드 투자기업의 제품에 대한 실증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실증 성공 시 수익계약 또는 우선구매, 혁신제품 지정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제 연계, 경찰청 R&D 과제와 펀드 투자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 실증 → 투자 → 조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 아울러 성과지표를 민간투자 유발액, 실증사업 참여 건수, 기술이전·사업화 성공률 등으로 맞춤형 설계하여, 단순 수익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정책 목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

- 총포 등 소지허가자의 갱신대상 확대에 따라 2026년도 우편료 예산증액은 불가피하나, 단순히 우편 발송량 증가에 대응하는 일시적 예산편성에 머물지 않고, 연락처 관리체계 개선과 모바일 전자고지 등 온라인 통지기능 도입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우편료 절감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예산안 중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된 6억 1,100만원은 시스템 연구·개발 비용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일반연구비(260-01)로 비목 변경이 필요함.

(가) 개 요

□ 동 사업은 범죄예방 기획·운영, 불법 풍속영업 규제, 민간 총포·화약 안전관리, 지역경찰운영 등 경찰의 전반적 범죄예방·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130억 8,800만원 대비 116억 1,700만원 증액(88.8%)된 24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11,909	13,088	24,705	11,617	88.8

※ 자료: 경찰청

(나) 총포 등 소지 허가자 통지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 효율화 필요

□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³⁴⁾에 따라, 기존 총포류(엽총·권총·공기총 등)에만 적용되던 3년 주기 갱신제도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이하 ‘무기류’)까지 민간보유 무기류 전반으로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갱신통지 대상 무기류는 약 10만 정에서 약 62만 정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허가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효력을 갖춘 등기우편 송달 대상자 또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연도별 누적 소지 허가 현황>

(단위: 정)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말 기준)
총포	123,854	116,186	113,424	109,977	106,678	104,628
도검	77,770	80,945	82,305	82,159	66,032	65,674
분사기	482,913	480,048	479,625	461,277	438,026	414,490
전자충격기	39,464	39,898	39,935	39,773	38,297	36,925
석궁	858	845	827	799	774	761

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 8.)

제16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총포소지 허가의 갱신예고)³⁵⁾에 따른 통지 또는 결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절차³⁶⁾를 통해 국민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적 조치로, 도달 효력을 갖춘 등기우편으로 행정통지를 송달하고, 소지 허가 미갱신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 취소나 형사처벌의 법적 효력 및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임.

□ 경찰청은 법률 개정으로 인한 통지 건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우편료 예산을 30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8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2025년 120백만원 → 2026년 308백만원). 그러나 현행 우편 송달 중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예산만 증액하는 방식은 행정 및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3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총포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소지허가를 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3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
2. 제45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사용허가의 취소

<최근 5년간 우편료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년	'22년	'23년	'25년 예산 본예산(A)	'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총포·화약 시스템 총기 소지자 등 통합 우편료	120	120	120	120	308	188	증액

※ 자료: 경찰청

- 최근 5년간 경찰청은 연평균 약 12만 4천 건의 행정통지를 발송하며 매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왔음. 2026년부터는 무기류 전반으로 갱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발송 건수가 약 12.3만 건(전체 허가자 36.7만 명의 1/3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5년간 우편물 발송 건수>

(단위: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말 기준)
125,423	125,942	124,586	110,587	135,690	100,057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무기류 소지자 중 연락처가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에는 수사 목적 외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허가대상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제시함.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³⁷⁾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갱신통지를 위한 연락처 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는 전자 행정송달 방식으로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민 동의가 전제되는 경우 활용 가능함. 경찰청이 최초 허가 또는 갱신 시 전자통지 동의서를 받아 동의자에 한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하고,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우편 발송하도록 개선할 경우, 우편료 절감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경찰청 및 타 행정기관 전자고지 활용 사례>

기 관	전자고지 내용	비 고
국세청	납세고지서 등을 카카오톡·문자로 발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고지, 자격득실 확인서 등	전자문서 발송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관련 각종 통지	전자문서 발송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고지, 과태료 부과 등	전자고지 활용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등	전자고지 활용

※ 자료: 경찰청

37)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한편, 경찰청은 2026년도에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³⁸⁾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스템 개발 사항에 ‘모바일 통지’ 기능을 추가할 경우 행정처리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우편료 효과 절감도 예상됨.
- 종합하면, 총포 등 소지허가 갱신대상 확대에 따른 우편료 증액은 불가피하나, 단순히 우편 발송 증가에 대응하는 일시적 예산 편성에 머물지 않고, 연락처 관리체계 개선과 온라인 갱신 및 모바일 전자고지 기능 도입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38)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2026년도 예산안 8억 1,300만원)은 현재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갱신 절차를 허가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개선 내용은 ① 온라인 갱신 절차 기능 도입, ② 무기류 위·변조 분석 기능 강화, ③ 경찰청 내·외부망 연계, ④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및 웹브라우저 표준화 등임. 또한, 경찰청은 향후 모바일 플랫폼과 연계한 통지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온라인 갱신 기능 도입 시 모바일 통지 기능을 병행·개발할 경우 우편 발송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됨.

(다)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비목 변경 필요

-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은 기존에 허가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했던 갱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온라인 갱신 절차 기능 도입 △무기류 위·변조 분석 기능 강화 △경찰청 내·외부망 연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및 웹브라우저 표준화 등을 수행할 계획임.
- 2026년 예산안에는 블록체인 기반 이미지 분석 솔루션, 데이터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상용프로그램 구매비 2억 200만원(자산 취득비), 기술료·제경비·직접인건비 등 전산개발 비용 6억 1,100만원(일반용역비) 등 총 8억 1,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총포·도검·분사기 등 온라인 갱신 시스템 세부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총포·도검·분사기 등 온라인 갱신 시스템 도입	813
○ 소프트웨어	202
- 블록체인기반 이미지 분석 솔루션	74
- ESB 솔루션 (에이전트,어댑터 포함) 등	112
○ 연구개발비	611
- 직접인건비	180
- 제경비	259
- 기술료 등	172

※ 자료: 경찰청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는 기관의 일상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단순 대행업무를 외부에 맡길 때 사용하는 경비로, 행사 운영·채용·영상 제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반 업무지원에 한정됨.
- 동 사업은 과학기술 기반 시스템 연구·개발(R&D) 성격의 사업으로, 시스템의 계획·설계·분석·조사·시험·기술개발·감리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상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된 예산 6억 1,100만원은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사업의 용도에 부합하는 적정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된 비목변경 (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비목변경(안)		변경액
		변경 전	변경 후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131-311)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일반용역비 (210-14)	일반연구비 (260-01)	611

[생활안전교통국]

(1) 사회적약자보호활동(1431-311)

-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제도의 필요성 및 만족도에 비해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지역별 편차도 일부 확인되므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시도청별 실태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능형 CCTV는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사업(1431-311)은 아동,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실종사건, 가정폭력·아동학대 및 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해 범죄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제작·실시하고,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각 범죄담당 경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164억 9,100만원 대비 19억 7,100만원 증액(12.0%)된 184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4,941	16,491	18,462	1,971	12.0

※ 자료: 경찰청

(나) 범죄피해평가제도 활성화 및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검토 필요

- 경찰청의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와 양형 등 형사 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임.³⁹⁾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 예산 4억 8,900만원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음.

<범죄유형별 범죄피해평가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8월)
운영 관서		166	208	230	259	259	259
전체 건수		988	1,391	1,696	1,883	1,975	1,640
범죄 유형별 현황	성폭력	432	640	779	739	928	638
	폭력	332	374	372	461	457	428
	스토킹	-	-	210	245	285	327
	살인	65	86	101	100	100	63
	기타	159	291	234	338	205	184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으며 2023년부터 전국 모든

39) 도입 경과를 살펴보면,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으며 2023년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 중임.

경찰서('25년 기준 261개 관서)에서 운영 중임. 범죄피해평가 절차는 위기개입·상담·면담·보고서 작성 등 총 5단계로 진행되며, 구속영장 청구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2023년부터 신속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⁴⁰⁾

- 경찰청에서 제출한 범죄피해평가제도 관련 자료를 살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범죄피해평가제도의 시행률이 매우 낮아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범죄피해평가 실시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391건에서 2025년 1~8월 1,640건(연간 추정 2,460건)으로 증가하였으나, 강력범죄 대비 시행률은 2025년 8월 기준 0.6%에 불과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임.

40) 경찰청에서 2023년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1%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범죄피해평가 실시 건수 및 시행률>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강력범죄*(건)	419,685	450,463	447,491	425,760	267,139
범죄피해평가(건)	1,391	1,696	1,883	1,975	1,640
시행률(%)	0.3	0.4	0.4	0.5	0.6

※ 자료: 경찰청

* 강력범죄 유형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 ☐ 범죄피해평가제도는 피해자 만족도⁴¹⁾ 96%, 타 피해자 권유 의향 93%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대비 시행률은 0.6%에 불과하여 제도의 확산이 미흡한 상황임.
- ☐ 특히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강화로 구속영장 신청 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범죄피해평가 지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범죄피해평가는 기본평가(2~3주 소요)와 신속평가(3~5일 소요)로 구분되는데,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한 경우 활용되는 신속평가의 경우 2023년 도입 이후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41) 2023년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1%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범죄피해평가 유형별 실시 현황 및 예산>

(단위: 건, 만원)

구 분	평가유형	소요기간	단 가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예산수요 (2026년)
기본평가	일반 사건	2~3주	18	1,743	1,803	1,454	2,000
신속평가	긴급 사건	3~5일	25	140	172	186	480
합계	-	-	-	1,883	1,975	1,640	2,480

주: 2026년 예산 수요는 2025년 1~8월 실적(1,640건)을 연간 환산한 수치

※ 자료: 경찰청

- 2025년 1~8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480건의 수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본평가 1,900건, 신속평가 420건 등 총 2,320건 분량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음.

<범죄피해평가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건)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정부안	예산 수요	차 이
전문가 수당	4.68	4.47	4.80	0.33
건수	2,300	2,320	2,480	160
기본평가	-	1,900	2,000	100
신속평가	-	420	480	60

※ 자료: 경찰청

- 특히 신속평가의 경우 단가가 기본평가(18만원)보다 높은 25만원 이고, 2023년 140건에서 2024년 172건으로 증가한 추세와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강화 분위기⁴²⁾를 고려할 때 2026년에는 약 48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안에는 420건 분량만 반영되어 있음.

둘째, 범죄피해평가 실시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시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함.

□ 2025년 1~8월 기준 지역별 시행률을 살펴보면, 전남(0.84%), 전북(0.82%), 세종(0.78%) 등이 높은 반면, 충북(0.45%), 부산(0.52%), 경기남부(0.54%) 등은 전국 평균(0.6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행률이 가장 높은 전남(0.84%)과 가장 낮은 충북(0.45%) 간 격차는 약 1.9배에 달함.

<2021~2024년 지역별 범죄피해평가 시행률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8월)	2025년 (1~8월)
범 위	0.20~0.7	0.31~1.0	0.41~1.2	0.5~1.6	0.5~0.8
전국 평균	0.5	0.6	0.7	0.9	0.6
지역간 격차 (최고/최저)	3.5배	3.7배	3.0배	3.2배	1.9배

※ 2024년 최종 시행률은 강력범죄 전체 425,760건비 대비 1,975건 피해평가 실시(실시율0.5%)

※ 자료: 경찰청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간 격차(최고/최저)를 살펴보면 2021년

42) 최근 스톱·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치안 수요가 연이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25.8월)」 발표, 구속 등 가해자 격리 강화 등 대응 고도화 방안 수립

3.5배, 2022년 3.7배, 2023년 3.0배, 2024년 3.2배로 지속적으로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임. 2025년에는 지역간 격차가 1.9배로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⁴³⁾

□ 이는 시·도경찰청별로 동 제도를 적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제도의 혜택을 균질하게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전문가 풀 확대, 제도 홍보 강화, 운영 매뉴얼 점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8월 강력범죄 대비 피해평가 건수>

(단위: 건, %)

지 역	강력범죄	범죄피해평가	시행률
전 남	8,134	68	0.84
전 북	7,822	64	0.82
세 중	1,548	12	0.78
경기북	15,751	121	0.77
인 천	15,261	110	0.72
울 산	5,052	34	0.67
제 주	4,568	30	0.66
강 원	6,950	45	0.65

43) 경찰청은 지역별 격차의 원인으로 범죄피해 건수 대비 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고, 전년도 실적 기반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구조에서 시·도청별로 강력범죄·관계성범죄 등 범죄피해평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집행률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경찰청은 향후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도청별 운영실적 점검·관리 및 내·외부 홍보 등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지 역	강력범죄	범죄피해평가	시행률
충 남	9,708	63	0.65
경 북	11,947	78	0.65
서 울	50,790	322	0.63
광 주	8,352	50	0.60
대 전	8,644	49	0.57
대 구	13,379	74	0.55
경기남	51,393	275	0.54
경 남	18,189	97	0.53
부 산	21,446	111	0.52
충 북	8,205	37	0.45
전국 합계	267,139	1,640	0.61

※ 자료: 경찰청

* 강력범죄 유형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 종합해보면, 경찰청은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필요성 및 만족도에 비해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지역별 편차가 다소 있으므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도청별 실태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능형 CCTV의 적극적 활용 및
지원 강화 필요

- '지능형 CCTV 활용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사업은 가해자에게 주거지가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범죄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위험을 자동 감지·경고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2026년도 예산안은 내역사업인 '피해자보호활동'에 지능형 CCTV 1,100대 설치를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6억 9,400만원이 편성됨.

<지능형 CCTV 사업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능형 CCTV 활용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1,703	1,703	1,703	1,703	-	-

※ 자료: 경찰청

- 최근 5년간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112신고가 급증하면서 안전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스토킹 범죄의 경우 2021년 14,509건에서 2025년 8월 27,603건(연간 추정 41,405건)으로 185% 급증하였고, 교제폭력은 2021년 57,305건에서 2025년 8월 68,324건(연간 추정 102,486건)으로 78% 증가함.

<최근 5년간 관계성범죄 112신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스토킹	14,509	29,565	31,824	31,947	27,603
교제폭력	57,305	70,790	77,150	88,394	68,324
가정폭력	218,680	225,609	230,830	236,647	184,188

※ 자료: 경찰청

□ 안전조치 위험도 평가결과, '매우 높음' 등급이 2024년 1.8%에서 2025년 8월 2.8%로 증가하고, '높음' 등급도 30.2%에서 35.8%로 증가하여 고위험 피해자의 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음.

<안전조치 위험도 등급별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4년	2025년 1~8월
매우 높음	547(1.8)	658(2.8)
높음	9,287(30.2)	8,510(35.8)
총 안전조치 건수	30,755(100.0)	23,743(100.0)

※ 자료: 경찰청

□ 안전조치 수단별 활용 현황을 보면 맞춤형 순찰(74.4%), 스마트워치(62.6%) 등 일부 수단에 편중되어 있고, CCTV(5.1%), 임시숙소(1.8%), 보호시설(0.4%) 등은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조치 수단별 활용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총 안전조치 건수	24,810	29,372	30,750	30,755	23,743
112등록	24,810 (100.0)	29,372 (100.0)	30,750 (100.0)	30,755 (100.0)	23,743 (100.0)
스마트워치	10,989 (44.3)	14,208 (48.4)	16,690 (54.3)	17,508 (56.9)	14,857 (62.6)
CCTV	907(3.7)	817(2.8)	984(3.2)	1,055(3.4)	1,204(5.1)
임시숙소	62(0.2)	185(0.6)	196(0.6)	306(1.0)	425(1.8)
보호시설	12(-)	19(-)	33(0.1)	49(0.2)	86(0.4)
맞춤형 순찰	18,639 (75.1)	21,485 (73.1)	22,247 (72.3)	22,388 (72.8)	17,671 (74.4)
신변 경호	17(0.1)	12(-)	115(0.4)	196(0.6)	332(1.4)
가해자 경고	1,824(7.4)	2,307(7.9)	2,684(8.7)	2,051(6.7)	1,643(6.9)
피해자 권고	2,845(11.5)	10,950 (37.3)	19,542 (63.6)	22,980 (74.7)	19,419 (81.8)

※ 자료: 경찰청

- 그런데 경찰청에서 제출한 안전조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질적 보호 효과가 높은 지능형 CCTV의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증가하는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CCTV의 경우 2021년 907건에서 2025년 1~8월 1,20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1~8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806건의 수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100건 지원예산만 편성되어 있음.

<지능형 CCTV 설치 수요 및 예산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정부안	예상 수요	차 이
설치 건수	1,100 (실적 1,055)	1,100 (1~8월 1,204)	1,100	1,806	706
예산액	16.94	16.94	16.94	27.81	10.87
집행액	16.94	13.62	-		
1대당 단가	154만원	154만원	154만원	154만원	-

주: 예상 수요는 2025년 1~8월 실적(1,204건)을 연간 환산한 수치

※ 자료: 경찰청

- 최근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급증하면서 지능형 CCTV 설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25년 1~8월 기준 스토킹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36.2%, 교제폭력은 22.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CCTV 설치도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함.

<2024~2025년 관계성범죄 신고현황>

구 분	'24.1~8월	'25.1~8월	증감율
총 계	226,830	280,115	23.5% ↑
스토킹	20,271	27,603	36.2% ↑
교제폭력	55,979	68,324	22.1% ↑
가정폭력	150,580	184,188	22.3% ↑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지능형 CCTV가 가해자를 자동 감지하여 피해자 스마트폰과 경찰서에 동시 알람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2025년 1~8월 동안 14명 검거(구속 6명) 등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방화를 시도한 스토킹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등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년과 동일한 1,100건 설치 예산(16.94억원)만 편성되어 있어, 실제 예상 수요(1,806건, 27.81억원)와 약 706건 분량(10.87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능형 CCTV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조치 수단의 균형적 활용을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로교통공단출연금(1331-314)

-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은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일부 주민 반대 여론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으며, 일정 단축으로 토지매입과 건축이 동시에 진행되어 토지매입 지연 시 사업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은 계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까지 면밀한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주민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장치의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수용이 중요하므로, 최초 장착 대상자 발생 이전까지 설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 사업(1331-314)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방송·운전면허시험관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도로교통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액 1,397억 900만원 대비 35억 6,500만원(2.6%)이 감액된 1,36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도로교통공단출연 (출연금)	145,005	139,709	136,144	△3,565	△2.6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6년도 지출 예산안은 4,472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4,400만원(3.4%)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6년도 자체수입 예산안은 3,111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 900만원(6.2%)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수 입	432,628	447,272	14,644	3.4
자체수입	292,919	311,128	18,209	6.2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	139,709	136,144	△3,565	△2.6
지 출	432,628	447,272	14,644	3.4
인건비	209,095	218,165	9,070	4.3
경상경비	4,363	4,491	128	2.9
사업비	214,333	219,604	5,271	2.5
예비비	4,837	5,012	175	3.6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나)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관련 면밀한 사업관리 및 지역사회
소통 필요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⁴⁴⁾ 따라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전국 27개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에 추가로 시험장을 2028년까지 건립할 계획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현황>

(광역시 이상)

구 분	시험장 명칭	도로명 주소(요약)	준 공 일
서울특별시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강남구 테헤란로	1980.06.04.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강서구 남부순환로	1999.04.30.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노원구 동일로	1984.12.24.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마포구 월드컵로	1994.01.19.
부산광역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남구 용호로	1990.03.31.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사상구 사상로	1979.05.12.
대구광역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북구 태암남로	1989.07.01.
인천광역시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남동구 아암대로	1998.07.27.
광주광역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예정)	북구(예정)	2027년 예정
대전광역시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동구 산서로	1981.09.07.
울산광역시	울산운전면허시험장	울주군 상북면	1995.12.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운전면허시험장(예정)	소담동(예정)	2028년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애월읍 평화로	1990.05.24.

※ 그 외 지역별 시험장: 경기(용인, 의정부, 안산), 충북(청주, 충주), 충남(예산), 강원(춘천, 강릉, 원주, 태백), 전북(전남, 광양), 경북(문경, 포항), 경남(마산)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44)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⑤시·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⑤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부재한 지역으로, 시민들은 인근 시험장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편도 2시간 내외를 이동하여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2024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8년 세종운전면허시험장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⁴⁵⁾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 업 개 요	조 감 도
▶ 대상부지: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2-81번지 일원 ▶ 부지면적 및 소유자: 17,804m²(약5,386평)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로 면허시험장 기 지정 부지 ▶ 사업예산 및 기간: 457억 원('24년~'28년) ▶ 조직구성: 민원부, 면허 시험부 2개 부서로 2급지 인력 약 35명 계획 ▶ 주요시설: 행정 본관동(행정 및 민원업무), 기능시험동(1, 2종 기능시험 등) 및 공원 등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본 사업은 토지매입비 134억 원, 건축비 283억 원 등 총 457억원 규모로, 2026년에는 설계비 9억 원이 반영되어 향후 토지매입 및 건축공사 408억 원과 시험용 차량 및 면허 발급기 등 시험장 운영을 위한 예산 등 39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며, 운영 인력 35명 규모의 2급지 시험장으로 운영될 계획임.⁴⁶⁾

4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24년 12월 기준) 세종시 인구 약 39만명, 자동차 등록대수 약 20만대. 세종시청 기준 인근 시험장까지 평균 이동거리 63.1km이며, 대전시험장(32.0km, 01:20), 청주시시험장(36.5km, 02:15), 충주시시험장(121.0km, 02:05), 예산시험장(63.0km, 02:30) 소요

<연차별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합 계		45,698	100	-	900	22,593	22,105
기본 계획수립		100	100	-	-		-
토지매입		13,409		-	-	13,409	-
건축	소 계	24,273	-	-	892	7,794	15,587
	설계비	892	-	-	892	-	
	건축비 등	23,381				7,794	15,587
기타	소 계	4,016			8	1,390	2,618
	부대비	1,589				530	1,059
	예비비	2,427			8	860	1,559
시험장 운영비		3,900	-	-	-	-	3900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최근 건설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이 행정처리 과정이나 토지매입 등에서 지연될 경우 공사비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큼.⁴⁷⁾ 실제로 공단이 2025년 7월 준공한 tbn 충남교통방송 건립 사례에서도 당초 계획 대비 공사비가 2019년 당초 계획 260억원에서 2025년 준공 시점 기준 295억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35억 원(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6) 1급지 시험장 13개소: 대전, 강남, 마산, 도봉, 대구, 안산, 남부, 북부, 서부, 인천, 전남, 강서, 용인.
2급지 시험장 14개소: 춘천, 의정부, 청주, 강릉, 예산, 전북, 제주, 충주, 울산, 원주, 태백, 문경, 포항, 광양(2급지 시험장은 1급지 시험장에 비해 인력과 시험 응시를 위한 시험용 차량이 적은 규모의 시험장)

47) 통계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2010년=100 기준)는 2025년 1월 기준 130.1로 5년간 약 30.1% 상승. 철근·레미콘 등 자재비 상승과 운반비·노무비 등 간접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2025년 1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tbn충남교통방송 건립 사업비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 계획	2025년 준공	증감	%
합 계		26,040	29,558	+3,518	+13.5
토지매입		2,603	2,603	-	-
건 축	소 계	15,327	18,849	+3,522	+23.0
	건 축	13,285	15,945	+2,660	+20.0
	설 계	700	700	-	-
	감 리	1,342	2,204	+862	+64.2
부대비		1,445	1,445	-	-
장비구축 및 운영비		6,665	6,661	△4	△0.1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따라서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이 행정처리 과정이나 토지 매입 등 건축 계획 과정에서 지연될 경우,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향후 예산 증액 요구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 특히 2027년에 토지매입(134억원)과 건축(77억원)이 동시에 계획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규모 건축사업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완료한 후 건축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시 진행 구조는 토지매입 절차⁴⁸⁾가 지연될 경우 건축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쳐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실제로 본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이미 일정 지연이 발생한 바 있음.

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당초 계획되었던 설계비가 2025년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는데, 공단은 2024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억원을 편성하고 부지선정 이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8월) 및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부지선정이 6개월 지연되어 2025년 2월에 완료되었음.

□ 공단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세종시와 협의하여 여러 후보지를 비교·분석하고 건립대상 부지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해당 부지는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면허시설용도로 이미 지정되었다는 설명임.

□ 그러나 부지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먼저 실시한 것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지역 내 일부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⁴⁹⁾ 주요 반대 사유는 시험장 면적이 협소하여 도로주행시험을 일반도로에서 실시할 수밖에 없고, 초보 운전자의 미숙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근 학교 밀집 지역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반도로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행코스를 도심 외곽으로 검토하고 있고,

49) 2025년 9월 8일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사업의 즉시 중단과 계획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됨.

전기차 및 차량 내부 안내방송 시스템 도입으로 소음·매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공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 건축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 추가 증가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지연까지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본 사업은 총사업비 457억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세종운전면허 시험장 건립사업이 계획된 일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면밀한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을 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행코스 설계, 안전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우려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이의제기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강화 필요

-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재범자(2회 이상)가 면허를 재취득할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안 19억 2,500만원 대비 전액 감액되어 미편성 되었음.

<음주운전방지장치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음주운전방지장치	-	1,925	-	△1,925	순감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은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윤창호법⁵⁰⁾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8% 수준으로 크게 줄지 않았음.

<음주운전 재범률>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 고
재범률(%)	45.4	44.5	42.2	42.3	43.8	-

※ 자료: 경찰청

5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2018.12.18. 시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및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었으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2019. 6. 25. 시행),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벌칙 수준을 상향하였음.

□ 동 제도는 음주운전 재범자(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일정 기간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것으로, 사후적 제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제도로,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규정치를 초과하면 엔진 시동을 차단하는 기계적 장치로, 음주 상황에서 차량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 관련 주요 내용>

설치대상	운영 형태	설치기간	교육 의무	미설치 차량 운전 시			장치손상
				행정 처분	결격 기간	형사 처벌	형사 처벌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의무	당해 음주운전 결격기간과 동일기간 (2(단순) ~ 5년 (뺑소니 등))	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	필요적 취소	1년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방지장치 작동 개요>

- ▶ 자동차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규정치를 넘는 경우엔 엔진을 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
- ▶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음주 상황에서 차량의 시동을 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음주운전방지장치 작동 절차 >



① 점화 스위치 on → ② 장치 워밍업 → ③ 음주측정 → ④ 시동 → ⑤ 운전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등록과 정상작동 여부 등의 검사를 경찰청으로부터 위탁⁵¹⁾ 받아 운영하며 장치의 등록과 관리는 공단이 담당하고 실체 부착은 공단이 인증한 제조업체가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동 제도가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물론 제도 대상자조차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주요 홍보 채널 어디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게재되어 있지 않으며, 제도 시행의 목적, 장치의 기능, 설치 절차, 비용, 교육 이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 전무한 실정으로, 제도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4년 10월) 이후 실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할 대상자는 최소 2년⁵²⁾ 후인 2026년 10월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2025년은 장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5개 권역의 음주운전방지장치 검사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52) 2024년 10월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된 사람(2회)의 결격기간(2년)이 지난 최초 시점은 2026년 10월로 예상

-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도의 정착 여부는 장치의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국민의 수용성과 이해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특히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제도 시행 초기 인지도가 낮아 대상자 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최초 장착 대상자 발생 전까지 명확한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홍보, 안내자료 배포 등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비국]

(1) 대테러위기상황관리(2132-311)

- AI 기반 사족보행로봇 도입은 활용 가능성, 기존 개발 로봇의 성능과 평가, 현장 투입 여건,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검증·테스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우선 도입하여 시범 운용을 통해 성능과 운용 효율성을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테러위기상황관리(2132-311) 사업은 경찰특공대를 육성하여 국가 안보·민생치안 확립을 지원하고, 각종 유형의 재난에 활동하는 경찰관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 장비 지급 및 안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339억 500만원 대비 18억 3,700만원 증액(5.4%)된 357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대테러위기상황관리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대테러위기상황관리	31,614	33,905	35,742	1,837	5.4

※자료: 경찰청

(나) 현장 투입 실효성과 활용 빈도를 고려한 AI 사족보행로봇
시범 도입 검토 필요

□ 'AI기반 사족보행로봇 도입' 사업은 인질·사제총기·폭발물 및 화생방
의심물질 발견 신고 등 고위험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에 앞서 로봇을
투입하여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 물질을 탐지·식별함으로써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에서는 사족보행 다목적 전술로봇 6대를 도입하며, 1대당
약 4억원으로 편성됨. 각 로봇에는 360° 회전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고, 폭발물과 화생방 탐지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 포함되어 현장 상황에 맞춰 활용되도록
계획됨. 이를 통해 고위험 사건 발생 시 경찰관 안전 확보와 신속한
현장대응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AI기반 사족보행로봇 도입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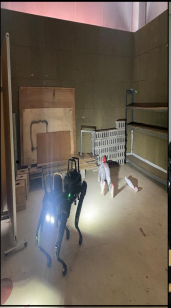
<자산취득비(430-01): ('25) 0 → ('26) 2,400백만원(순증)>

○ 사족보행로봇 구입: 2,400백만원 = 400백만원 × 6대

- 로봇 구입(본체, 카메라, 센서, 컨트롤러 등 포함): 약 230 ~ 250백만원
- 통신장비(GCS): 약 120 ~ 180백만원
- 탐지장비 브라켓: 약 23백만원

※ 자료: 경찰청

[SI기반 사족보행로봇 도입 활용 등]

						
사족보행로봇 폭발물·화학시료 등 확인 실시간 영상 전송	현장지휘소에서 영상 확인 ⇒ 작전 수립	경찰 진입 폭발물 제거 또는 화학시료 채취 ⇒ 현장지휘소에 영상 전송	현장지휘소 실시간 영상 확인			

- 동 사업은 고위험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투입 여건을 고려할 때 기대하는 신속 대응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신속 대응 실효성 관련하여 현장 투입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사족보행로봇 역시 전문 운용인력 확보, 장비 적재·수송, 조작용원 준비, 현장 도착 후 조립·셋업·통신점검 등 여러 절차로 인해 특공대와 유사한 투입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경찰청의 운용계획에 따르면 운용요원이 컨트롤러로 원격 조정하고 송·수신장치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는 구조로, 이는 현장 도착 후에야 작동 가능한 시스템임. 따라서 로봇 도입이 실제로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경찰관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운용 시나리오와 소요시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위험 사건 현장은 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므로, 로봇의 주행 가능 지형(계단, 경사, 장애물 등), 작동 가능 환경(온도, 습도, 방수 등), 배터리 지속시간, 통신 송·수신 거리 등 핵심 성능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특히 건물 내부, 지하, 협소한 공간 등 다양한 현장에서 통신 안정성과 장애물 극복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6대 도입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신고 건수 중 실제 로봇 투입이 필요한 사건 비율이 낮아 연간 실제 투입 건수는 제한적일 수 있음. 최근 3년간 총기·폭발물·화생방 신고 건수는 2023년 3,747건에서 2024년 437건, 2025년 6월 기준 17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특히 화생방 의심 신고는 2023년 3,285건에서 2024년 83건으로 급감하여 신고 건수 변동성이 큼.

□ 로봇 투입이 필요한 사건의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연간 실제 투입 건수가 제한적일 수 있음. 경찰청은 6대를 전국 시·도청 또는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나, 대당 4억원의 고가 장비가 연간 극히 제한적인 횟수만 활용될 경우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총기·폭발물신고 사건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총 계(건)	3,747	437	176
총 기	151	92	54
폭발물 신고	311	262	104
화생방 의심 신고	3,285	83	18

※ 자료: 경찰청

- 종합하면, AI 기반 사족보행로봇 도입은 활용 가능성, 기존 로봇 성능, 현장 투입 여건, 예산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초기 단계에서는 최소 장비를 우선 도입하여 시범 운용을 실시하고, 성과와 운용 효율성을 평가한 뒤 단계적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신규 장비 도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찰관 안전 확보, 현장대응 능력 향상 등의 성과목표와 함께 로봇 투입 횟수, 현장 도착 소요시간, 탐지 성과 등의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초기 시범 운용을 통해 이를 검증한 후 확대 도입과 배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수사기획조정관]

(1) 수사지원(1231-311)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일정과 예산 편성 간의 일시적 공백 발생에 따라, 향후 스캔용역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현장 스캔 장비 보급 확충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근매식비는 인건비 보조적 성격상 근무형태나 인력운용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신규 증액 요구에 앞서 유사 사업의 집행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조정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수사지원(1231-311) 사업은 경찰법상 경찰의 직무로 규정된 ‘범죄 수사활동’을 위하여 경찰의 수사업무에 필요한 물적, 인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2,203억 2,200만원 대비 95억 3,100만원이 증액(4.3%)된 2,298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수사지원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B-A)/A
수사 지원	229,278	220,322	229,853	9,531	4.3

※ 자료: 경찰청

(나)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스캔
용역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인프라 보강 필요

- '차세대KICS 스캔시스템' 사업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25.10.10)에 따른 스캔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캔용역 사업 및 지역
경찰 스캐너 보급을 통해 차세대KICS 스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3억 6,300만원이 순증 편성되었음.
스캔용역비는 4,870백만원(113원×43,099,056면), 스캐너 구입비는
1,493백만원(730천원×2,045대)으로 구성됨.

<차세대KICS 스캔시스템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증 감
스캔 시스템	5,417	-	6,363	순증
- 일반용역비 (210-14)	1,359	-	4,870	순증
- 자산취득비 (430-01)	4,058	-	1,493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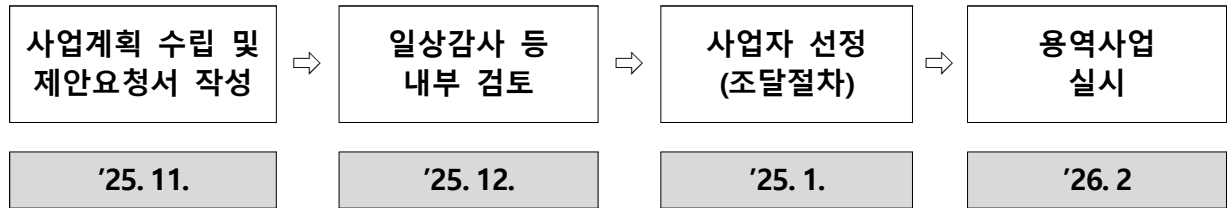
※ 자료: 경찰청

-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제도는 수사·기소·재판·집행 등 형사절차
전 단계를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024년 9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을 개통하였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법무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완전 전자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그러나 동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조기 안착 및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스캔시스템 사업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21.10)에 따라 사건기록물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2024년 스캔용역비 1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법 시행 시기 지연으로 불용되었고, 2025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음. 이로 인해 법 시행 일정에 맞춘 사건기록 전자화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경찰청 계획에 따르면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은 2025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법 시행('25.10.10) 이후에야 용역사업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제 용역 개시 시점('26.2월) 까지 약 4개월의 공백이 발생하여 시행 초기 스캔업무가 수사관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음.

<차세대KICS 스캔시스템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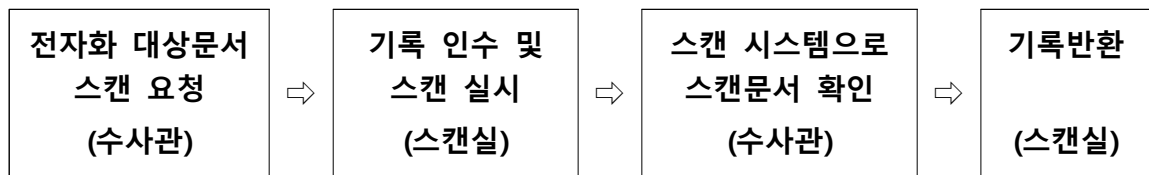
- 법원행정처가 “10월 10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전자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시행 초기 스캔 적체 및 수사지연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경찰청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계약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과도기 동안의 수사현장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법정 의무사항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행시점을 고려한 선제적 사업관리가 요구됨.
- 둘째, 민원인 등이 제출한 실물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기 위한 장비인 스캐너는 2024년 수사팀당 1대 보급되었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경찰관서당 1대 보급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전자기록 시범 유통 과정과 현장 의견 등을 통해 현장 수사관들은 제도변화에 따른 스캔 업무의 부담감을 느끼는 동시에 전자화 과정에서 스캔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⁵³⁾

53) 뉴시스, “인력 부족한데, 수백 장 일일이 스캔까지”...경찰 수사서류 ‘전산화’에 우려도 (2025.09.05.)

- 특히, 경찰청은 2015년부터 '수사부서 사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경찰관서마다 조사실을 설치·운영 중이나, 실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조사실에는 스캐너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조사실에 스캐너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수사관은 피조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즉시 스캔하지 못하고 조사실 밖 사무실로 이동해 별도로 스캔을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사의 흐름이 중단되고 피조사자가 조사실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는 형사절차 전자화 제도의 취지인 "형사절차의 신속성과 국민 편의성 제고"와 다소 괴리가 있으며, 민원인이 조사 중 직접 제출한 자료를 즉시 전자화할 수 없는 상황은 조사시간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찰청은 조사실 등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스캐너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사 효율성 및 국민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스캔용역사업은 고소장 등 실물 서류를 전문 용역인력이 전담 처리함으로써 수사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임. 경찰청은 스캔실이 설치된 전국 152개 관서(시·도청 15개, 경찰서 137개)에만

용역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평일 09~18시 상시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야간·휴일(18~09시) 시간대에는 수사관이 보완 수행하는 이중체계를 유지할 예정임.

<스캔용역(스캔실) 운영 흐름도>



※ 자료: 경찰청

- 그러나 스캔실 설치대상 관서별 공간 확보, 보안시설, 네트워크 구축 등 물리적 인프라 준비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경찰청은 스캔 장소는 각 관서 실정에 따라 상이(별도 스캔실 또는 수사지원팀 사무실 등)하여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스캔 서류에는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법 시행 전까지 관서별 보안등급 부여, 출입통제, 용역인력 관리 방안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외부 용역인력 투입에 따른 정보보호 및 수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병행하고, 인력·장비·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여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요구됨.

(다) 수사경찰특근매식비 증액 필요성 재검토 필요

- 수사경찰 특근매식비는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부서 근무자 중 비현업 근무자(12,892명)가 초과근무 시 사용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5억 4,200만원(14.3%) 증액된 4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수사경찰특근매식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4년 예산	'24년 결산	'25년 예산(A)	'25년 집행 (8월말)	'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수사경찰 특근매식비	3,790	2,820	3,790	3,247	4,332	542	14.3

※ 수사경찰특근매식비는 2025년부터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1231-313)」에서 「수사지원(1231-311)」 사업으로 이관(3,790백만원)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2025년 특근매식비 단가인상(7천 원→9천 원, 28.6%↑) 및 사업이관으로 인한 지급대상 증가⁵⁴⁾ 등에 따라 특근매식비 소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수사업무 지원을 위해 2026년도에는 5억 4,2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함.⁵⁵⁾

- 그러나 경찰청 전체 세부사업별 특근매식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업에서 특근매식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4) 경찰청은 2025년부터 형사국 소관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1231-313)'에서 '수사지원(1231-311)'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수사지원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이 형사국 소관부서 근무자에서 국수본 소속 전 수사부서 근무자로 확대(약 6,000명 -> 약 13,000명)됨에 따라 집행액(집행률)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55) 2026년도 예산 산출근거는 9천원(단가) × 12,892명(대상인원) × 37회(연간 특근횟수) = 43억 3,2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단가 인상분(28.6%)의 절반 수준(14.3%)을 인상한 것임.

<수사경찰특근매식비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 산(A)	집 행(B)	불 용 액 (이·전용 포함)	집 행 률(B/A)
2022년	4,738	2,880	1,858 (338)	60.8
2023년	4,738	3,542	1,196 (857)	74.8
2024년	3,790	2,820	970 (446)	74.4
2025년(8월 말)	3,790	3,247	-	85.7

※ 자료: 경찰청

- 2022년의 경우 예산 47억 3,800만원 중 28억 8,0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60.8%에 불과하였으며, 2023년 74.8%, 2024년 74.4%로 최근 3개년 평균 집행률은 약 70% 수준임.
- 특히 2024년의 경우 예산 37억 9,000만원 중 28억 2,000만원만 집행되어 약 9억 7,000만원(25.6%)이 이·전용 또는 불용되었으며, 이는 2026년도 증액 요구액 5억 4,200만원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규모임.
- 더욱이 경찰청 전체 세부사업별 특근매식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업에서 특근매식비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 주요 세부사업별 특근매식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 사업명)	'22년			'23년			24년		
	예 산	집 행	불용률	예 산	집 행	불용률	예 산	집 행	불용률
형사· 교통·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 역량 강화 ¹	4,400	2,880	34.5	3,881	3,542	8.7	3,371	2,820	16.3
범죄 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	411	231	43.9	211	178	15.5	1,075	914	15.0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256	99	61.2	259	118	54.4	259	86	66.7
교통 안전 활동	9,729	9,511	2.2	9,650	9,167	5.0	9,772	9,149	6.4
경비 경찰 활동	14,269	14,060	1.5	15,868	15,635	1.5	17,751	17,537	1.2
신임 순경 교육	2,127	1,290	39.4	30	17	44.6	18	18	0.0
수사 경찰 전문 교육	6	1	84.5	6	1	78.3	6	0	93.1

※ 주1: 수사경찰특근매식비는 2025년부터 '수사지원' 사업으로 편성(3,790백만원)

※ 자료: 경찰청

<세부사업별 특근매식비 불용률이 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 산	집 행	불용액	불용률	예 산	집 행	불용액	불용률
수사경찰 전문교육	6	1	5	78.3	6	0	6	93.1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259	118	141	54.4	259	86	173	66.7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211	178	33	15.5	1,075	914	161	15.0
형사·교통·여성 청소년 범죄수사 역량강화 (수사경찰 특근매식비)	3,881	3,542	339	8.7	3,371	2,820	551	16.3

※ 2026년도 수사경찰특근매식비 543백만원 증액 요구

※ 자료: 경찰청

□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수사경찰 전문교육은 불용률이 78.3%에서 93.1%로, 사회적약자보호활동은 54.4%에서 66.7%로 증가 되었으며, 수사경찰 특근매식비도 8.7%에서 16.3%로 불용률이 증가하였음.

□ 경찰청 전체의 특근매식비 예산 운용현황을 보면, 일부 사업에서는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반면 다른 사업에서는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사업 간 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찰청은 특근매식비가 인건비 보조적 성격상 근무형태나 인력운용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증액 요구에 앞서 사업 간 예산 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그럼에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증액을 검토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형사국】

(1)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1231-313)

- 경찰청은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1231-313) 사업의 폴리그래프의 단가를 과학수사 역량강화(1231-314) 사업의 거짓말 탐지기와 동일하게 실제 가격을 예산 단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과학수사 역량강화(1231-314) 사업의 내역사업인 거짓말 탐지의 명칭을 폴리그래프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1231-313)는 강력범죄,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마약범죄 등의 수사활동을 지원하고, 공정한 사고처리를 위한 현장 수사장비 지원으로 교통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196억 6,000만원 대비 4,000만원 감액(0.2%)된 19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22,623	19,660	19,620	△40	△0.2
· 형사활동 지원	4,260	2,078	2,891	813	39.1
· 사회적약자대상범죄 전담수사팀역량강화	3,665	3,776	2,095	△1,681	△44.5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1,580	2,598	2,332	△266	△10.2
· 사회적약자대상 범죄 피해자 지원	2,720	2,598	2,332	△266	△10.2
· 마약조직범죄 수사활동 지원	3,594	8,364	9,458	1,094	13.1
· 과학분석을 통한 정밀한 교통사고조사	2,824	1,680	1,680	-	-
· 교통사고조사 운영	3,980	1,164	1,164	-	-

※자료: 경찰청

(나) 폴리그래프 예산 단가를 조정할 필요

- 내역사업인 과학분석을 통한 정밀한 교통사고 조사의 내내역사업인 교통조사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4천만원이 편성됨. 이 중 폴리그래프 검사실 운영에 6,500만원, 폴리그래프 교체에 1억 7,500만원이 편성됨.

<내내역사업인 교통사고 폴리그래프 예산의 세부 내역>

- ② 교통조사 폴리그래프: (2025 본예산) 240백만원 → (2026 요구) 240백만원, 전년동
- 폴리그래프 검사실 운영: 6,500만원
= 21개소(검사실 전체 개소) × 258,000원 × 12개월
 - 폴리그래프 노후교체: 1억 7,500만원
= 5개(연간 교체대수) × 3,500만원

- 폴리그래프 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5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 집행과정에서는 인상된 가격인 4,300만원을 기준으로 구매하여 총 4대를 구매하고 있음. 경찰청은 2026년 예산을 통해서도 4대를 구매할 예정임.

- 별도의 세부사업인 과학수사 역량강화(1231-314)의 내내역사업인 거짓말탐지 기법에 따라 구매하고 있는 동일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의 예산 단가가 2024년부터 4,2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 강화(1231-313) 사업의 폴리그래프 예산 단가를 4,250만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과학수사역량강화(1231-314)의 내내역사업 거짓말탐지기법의 세부 내역>

14. 거짓말탐지 기법 : (2025) 638백만원 → (2026) 638백만원, 전년동

- 검사실 개보수: (2025) 165백만원 → (2026) 165백만원(3개소×55백만원), 전년동
- 검사기 보급: (2025) 340백만원 → (2026) 340백만원(8대×42.5백만원), 전년동
- 검사기 유지보수: (2025) 133백만원 → (2026) 133백만원(1년×133백만원), 전년동

- 위의 과학수사역량강화(1231-314) 사업의 예산안의 세부내역에서는 거짓말탐지 기법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사업의 폴리그래프와 동일하므로 거짓말탐지와 폴리그래프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과학수사역량강화(1231-314)

-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는 우편통지 비율이 51%로 높아 예산이 전년 대비 130.4% 급증하고 있는데, 법령상 문자통지와 우편통지가 동등한 통지 수단으로 인정되고 건당 비용이 4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편통지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과학수사역량강화(1231-314) 사업은 일선 수사경찰의 신속·정확한 범죄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인 검거, 증거 수집 등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보급하고 및 기법을 도입·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442억 5,200만원 대비 61억 5,100만원이 증액(13.9%)된 504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과학수사역량강화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학수사역량강화	37,802	44,252	50,403	6,151	13.9

※자료: 경찰청

(나)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증액): 우편통지 비율
절감 통한 예산 효율화 필요

- 과학수사역량강화의 내역사업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 사업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24.1.)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회 목적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가 대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2,600만원(130.4%) 증액된 4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 예산안>

구 분	'25년 예산(A)	'26년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	2,014	4,640	2,626	130.4%

※ 자료: 경찰청

- 「전기통신사업법」⁵⁶⁾은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국민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경찰청은 연간 200만건 이상의 통지 의무 부과에 따른 수사관 업무 가중을 고려하여 2024년 9월부터 KAIT에 통지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56)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KAIT는 정보주체의 현재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여 1단계 문자 통지를 실시하고, 번호 미확인 또는 문자 실패 시 주소지 기반으로 2단계 우편(등기)통지를 실시하고 있음.⁵⁷⁾ 대행 수수료 단가는 KAIT의 시스템 구축 선투자 비용과 운영비, 문자·우편 발송 원가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2024년 4월 통지대행 예상 건수 감소(연 432만건 → 377만건) 및 시스템 운영 개시 시점 연기(6월→9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 단가를 재산정하였음.⁵⁸⁾

57) KAIT는 정보주체의 현재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여 1단계 문자통지를 실시하고, ① 휴대전화번호 값이 없는 경우, ② 통신사 회선 확인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문자 발송 후 5시간 내 단말기 도달(수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2단계 우편(등기)통지를 실시하고 있음.

58)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시스템 구축비 38.44억원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 선투자한 비용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2024년 10억 30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7억 2,800만원씩 회수하는 계획을 전제로 KAIT는 통신사 및 시스템 구축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당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통지대행 시스템 구축비용 회수계획>

(단위: 백만원, 만건)

구 분		총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KAIT 등 구축비 회수 계획		3,844	1,003	728	728	728	728
당초 예상 통지량		1,858만건	130만건	432만건	432만건	432만건	432만건
산출 단가(원) (구축비+운영비+발송실비 ÷ 통지건수)	문자 (80%)	390.5	1004.9	344.4	344.4	344.4	344.4
	우편 (20%)	3,210.5	3824.9	3164.4	3164.4	3164.4	3164.4

※ 자료: 경찰청

당초 단가는 ① 시스템 개발 비용(38.44억원), ② 통지대행 운영비(연 5억원, 5년간 25억원), ③ 발송 원가(113.37억원)를 합산한 금액(177.3억원)을 ④ 예상 통지대행 총 건수(18,585,353건, 문자(80%) 14,868,282건 / 우편(20%) 3,717,071건)로 나누어 산정하였음((①+②+③)÷④).

그러나 2024년 4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가 당초 예상(연 432만건)보다 감소(연 377만건)하고 시스템 운영 개시 시점이 연기(6월 → 9월)됨에 따라, KAIT의 투자비 회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2024년 7월 단가를 재산정하여 문자 930원, 우편 3,750원으로 인상되었음.

<통지대행 수수료 단가 변화>

구 분	발송 원가	당초 단가('24.1)	인상 단가('24.7)	인 상 액	인 상 륜
문자 통지	50원	390원	930원	540원	138%
우편 통지	2,850원	3,210원	3,750원	540원	17%

※ 자료: 경찰청

- 2025년도 예산은 시행 초기로 별도 통계 없이 2022년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건수를 기준으로 문자:우편 = 87:13 비율로 산정하였으나, 2025년 1월~9월 실제 운영 결과 문자 42.7%, 우편 57.3%로 나타나 당초 예산을 크게 벗어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실제 운영 실적을 반영하여 문자 43%, 우편 51%로 산정하였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 예산안 세부내역>

'25년 산출내역: 2,014백만원

- ① 문자통지대행: 903백만원 (2,315,511건 × 390원)
- ② 우편통지대행: 1,111백만원 (345,996건 × 3,210원)
- ※ '25년 통신이용자정보 취득 예상 건수 2,661,507건 중 문자통지 비율 87%, 우편통지 비율 13%로 산정

'26년 산출내역: 4,640백만원

- ① 문자통지대행: 802백만원 (862,858건 × 930원)
- ② 우편통지대행: 3,838백만원 (1,023,390건 × 3,750원)
- ※ '26년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예상 건수 2,006,647건 중 문자통지 (43%) 862,858건, 우편통지(51%) 1,023,390건으로 예상

<예산안 책정시 문자·우편 비율 변화>

구 분	'25년 예산 산정 시	'25년 실제 운영(1~9월)	'26년 예산안
문자통지 비율	87%	42.7% (596,736건)	43%
우편통지 비율	13%	57.3% (798,902건)	51%

※ 자료: 경찰청

-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는 우편통지 비율이 51%로 높아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데, 법령상 문자통지가 허용되고 건당 비용이 4배 저렴함에도 우편통지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는 2025년 20억 1,400만원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46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4% 증가하는데, 이는 단가인상과 우편통지 비율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⁵⁹⁾ 특히 우편통지 비율이 당초 예상(13%)을 크게 상회하여 2025년 실제 운영 결과 57.3%(1월~9월 기준 798,902건), 2026년 예산안 기준 51%에 달하고 있어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찰청은 우편통지 비율이 당초 예상(13%)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 ① 통신사 회선 확인 비대상의 경우(13.3%) ② 통신사 회선

59) 2024년 7월 단가 인상으로 문자통지는 138%(390원 → 930원), 우편통지는 17%(3,210원 → 3,750원) 증가하고, 우편통지 비율이 당초 예상(13~20%)을 크게 상회하여 51%에 달한다는 점임. 이로 인해 우편통지 예산이 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음.

확인 실패(약 35.2%), ③ 문자 발송 실패(약 19.7%, 문자메시지 발송 후 5시간 내 단말기 수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⁶⁰⁾

□ 그러나 이러한 사유 중 일정 부분은 시스템 개선이나 통신사 연계 절차의 보완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경찰청은 통신사 회선 확인 대상 확대, 문자 도달 확인 기간 조정, 대상자별 통합 통지기능 개발 등 통지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체 통지대상 중 문자통지로 전환 가능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⁶¹⁾

□ 한편, KAIT의 시스템 구축비 38억 4,400만원은 통지 건수에 비례하여 회수되는 구조로 단가에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60) ① 통신사 회선 확인 비대상(약 13.3%)은 휴대전화번호 값이 없는 유형(예: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의 경우 문자통지 절차 없이 우편통지로 진행,
② 통신사 회선 확인 실패(약 35.2%): 제공된 휴대전화번호가 해지 등으로 현재 사용 중인 회선이 아닌 경우
③ 문자 발송 실패(약 19.7%): 문자메시지 발송 후 5시간 내 단말기 도달 수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단말 미지원, 전송시간 초과, 단말기 일시정지 등

61) 참고로, 경찰청은 현재 문자통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첫째, 통신사 회선 확인 대상 확대를 통해 KAIT와 유·무선 사업자 간 가입 정보 조회 기능을 보완하여, 휴대전화번호 값이 없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토대로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전체 통지대상 중 ‘통신사 회선 확인 비대상(약 13.3%)’과 ‘통신사 회선 확인 실패(약 35.2%)’ 중 일부를 문자통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둘째, 문자 도달 확인 기간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는 문자통지 실패 판단 기준이 ‘5시간 내 도달’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24시간 내 도달’로 조정하고 통지 시점을 제공 시점으로부터 ‘25일째’에서 ‘24일째’로 변경하면, 법상 ‘30일 내 통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문자 도달 확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문자 발송 실패(약 19.7%) 중 전송시간 초과 등 사유로 우편통지로 전환된 일부 건을 문자통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셋째, 대상자별 통합 통지 기능 개발을 통해 복수의 통신사업자로부터 동일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 개별 발송되던 통지를 통합 처리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는 사업자별 기준으로 통지되어 동일 수사 건에 대해 여러 건의 중복 통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면 중복 메시지 차단으로 인한 문자 발송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KAIT는 통지 건수가 감소하면 건당 단가를 인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려 하고, 통지 건수가 증가하면 수사기관의 예산편성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통지 건수 변동 리스크가 경찰청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26년 예산안 기준 통지대행 유형별 단가 집행 예상>

구 분		단가 (A + B)	발송원가 (A)	운영비+구축비 (B)
문자통지(43%) (862,858건)	건별	930원	50원	880원
	총액	802백만원	43백만원	759백만원
우편통지(51%) (1,023,390건)	건별	3,750원	2,850원	900원
	총액	3,838백만원	2,917백만원	921백만원
계		4,640백만원	2,960백만원	1,680백만원

※ 자료: 경찰청

□ 문자통지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평균 발송 원가를 낮추게 될 경우 향후 통지 건수에 증감이 있더라도 수사기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⁶²⁾, 문자통지 건수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노력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단가 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협상할 필요가 있음.⁶³⁾

62) ① 문자통지 비율 확대 시 △통지 건수가 증가하더라도 예산 범위(4,640백만원) 내에서 집행 가능 △초과 회수된 운영비+구축비(164백만원 = 1,844백만원 - 1,680백만원)에 대한 단가 인하(약 79원 = 164백만원 ÷ 2,074,843건) 협상 가능함.

② 반면, △통지 건수가 감소하더라도, 예산 범위(4,640백만원) 내에서 집행 가능 △운영비+구축비 부족분(171백만원 = 1,680백만원 - 1,509백만원)에 대해 단가를 인상(약 101원 = 171백만원 ÷ 1,697,623건)하더라도 총 대행비용은 3,838백만원(3,667백만원 + 171백만원)이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여 KAIT 투자비 회수 계획에는 지장이 없음.

63) 경찰청에 따르면 KAIT는 2025년까지 구축비용 중 18억 9,800만원(49.5%)을 회수할 예정이고, 2026~2028년 동안 나머지 비용을 회수할 예정임. 투자비 회수 완료 후에는 구축비용 부분을 제

<문자통지 비율 확대(10%) 시 통지 건수 증감(±10%) 대응 시나리오>

구 분		계	문자 통지(53%)	우편 통지(41%)
통지 건수 증가 (+10%)	통지대행 건수	2,074,873건	1,169,875건	904,998건
	발송원가	2,638백만원	59백만원	2,579백만원
	운영비+구축비	1,844백만원	1,029백만원	815백만원
	소계	4,482백만원	1,088백만원	3,394백만원
통지 건수 감소 (△10%)	통지대행 건수	1,697,623건	957,170건	740,453건
	발송원가	2,158백만원	48백만원	2,110백만원
	운영비+구축비	1,509백만원	842백만원	667백만원
	총액	3,667백만원	2,917백만원	921백만원

※ 자료: 경찰청

외한 통지 발송원가와 연간 운영비(5억원)를 기준으로 통지대행 수수료를 문자 315원(현재 930원 대비 66.1% 감소), 우편 3,115원(현재 3,750원 대비 17% 감소) 수준으로 재산정하기 위해 수수료 단가 재협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